방송기자연합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우수 사례 모음집

제1회~제8회 팩트체킹 공모전 우수 수상작 모음

인천시 미추홀구의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조례는 제도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낮다?

'옐로체커(신하영)'

제1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대상 수상작

검증 대상

인천시 미추홀구의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조례는 제도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낮다?

선정 이유

해당 조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만들어진 계기나 성매매 여성들의 의견, 그리고 실제 실효성을 심층적으로 따진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정확한 내용보다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팽배해 있어, 객관적인 팩트체킹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검증 방법

법률 및 조례 확인, 실증 사례 조사, 문헌 연구, 현장 및 심층 취재

검증 내용

대부분 가게가 굳게 문을 걸어 잠근 어둑한 골목길. 그 사이를 따라가니 몇 안 되는 노란색 불빛이 힘없이 골목을 밝히고 있다. 노란빛의 가게 앞에는 잔뜩 웅크린 중년의 여성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인천시 미추홀구의 집창촌 '옐로하우스' 이야기다. 인천시 성매매 집결지인 '옐로하우스'에서는 철거를 앞두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미추홀구의 집창촌, 일명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기 위해 생활비·주거비·교육비 명목으로 1년간 22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활 의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령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위해 매월 2회 의무적으로 상담에 출석해야 하고, 지원금 수령 이후 성매매 산업에 재유입하면 수령했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조례의 목적은 분명하다. 성매매 종사자들을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지역 내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다. 조례 제정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 지원금 반대합니다' 청원이 올라왔고 15,191명이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한 유명 유튜버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탈세인 성판매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지원금을 자활의 용도로 사용할 리가 없다' '불법행위를 했더니, 2000만 원 보너스를 받는다'는 등 비판 여론도 거셌다. 이처럼 자활지원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미추홀구의 지원금 정책은 '단속 강화'를 통해 성매매를 척결하려 했던 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쟁점 1. 불법 산업 종사자에게 지원금, 법적 근거는?

이 조례는 2004년 제정 및 시행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단속을 통해서 성매매를 뿌리 뽑겠다는 '성매매 처벌법'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을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해 이들을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을 지원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해 지자체별로 상담소와 자활지원 센터를 이미 운영 중이고, 의료비와 교육훈련비 등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쟁점 2. 처벌 강화로 해결할 순 없나?

지원금 조례에 반대하는 측의 골자는 지원금보다는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처벌주의'의

인천시 미추홀구의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조례는 제도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낮다?

'옐로체커(신하영)'

입장에서 성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범죄자로 규정해 엄벌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그러나 '처벌주의'가 성매매 산업을 감소 시켰는지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암시장 전문 조사업체인 미국 하보스코프 닷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약 13조 원으로 세계 6위이다. 또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앞서 언급된 수치의 3배에 달하는 37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 위주 정책만이 잇따르다 보니 법망을 피하고자 오피스텔방·출장 마사지라는 변종 성매매가 등장했다. 역삼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총 세대의 11.3%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변종 성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처벌 위주의 성매매 근절 대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별 시행 현황

지역	지원금 수령인원(명)	이탈인원(명)	시행 후 성판매자 증감률(%)
대구광역시	35	0	- 36.4 %
전주시	11	0	- 43 %
아산시	4	0	자료 없음
광주광역시	12월 시행 예정		
성북구	세부 계획 논의 단계		

쟁점 3. 성매매 근절에 효과 있을까?

처벌 위주의 성매매 근절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이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조례다. 현재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미추홀구 외에도 5곳이 있다. 지난해 11월 조례가 제정된 성북구는 아직 시행 준비 단계이고, 광주광역시는 올해 12월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지원 기간이나 지원 금액의 크기를 두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11월 조례가 제정되어 이듬해 10월부터 시행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18년 10월 9명이 지원금 수령을 완료했고 현재 26명이 수령 중에 있다. 지급이 완료된 9명 중 7명은 재취업에 성공했고, 이탈자는 없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구시 집창촌인 '자갈마을'의 업소의 수와 종사자의 수가 각각 37개 업소 110명이었지만, 18년 10월 20개 업소 7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전주시도 17년 12월을 시작으로 현재 11명이 성매매 종사자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 전주시 집창촌인 '선미촌'의 종사자 수는 조례 제정 전 70명에서 현재 40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신라대 최희경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시 완월동의 경우, 지원금의 도움으로 탈성매매에 성공한 비율은 66.8%, 확인 불가를 포함한 탈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비율은 33.2%였다. 특히 생계비 지원·직업 훈련·참여 기간이 탈성매매 성공 여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전주시청 여성가족과 조은혜 주무관은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풍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성산업 전체 규모를 줄였다는 효과는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쟁점 4. 옐로하우스 여성들의 자활 의사는?

지원금 조례가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의지가 관건이다. 조례에 반대하는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지원금이 자활에 쓰일지 장담할 수 없으며, 이후에 다시 성매매 업계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으냐는 비판이다. 이에 옐로하우스 여성들은 '최종 목표가 이곳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라며 자활 의지를 밝혔다. 현재 옐로하우스에서 종사하고 있는 A 씨는 "업소에서 일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공부하기 위해 업주에게 그만둔다고 했다. 하지만 1년간의 수입으로는 업주에게 진 700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종사자 B 씨는 "새 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계유지비와

직업 훈련비"라고 했다. 과거 옐로하우스에서 일하다 탈성매매에 성공한 C 씨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 당시 44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자립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원금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미추홀구의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금 조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단속을 강화한 기존 방식이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지 못하자 관점을 달리해 대안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이제 겨우 첫 삽을 뜬 만큼 미추홀구의 조례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활지원금 조례가 '풍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급을 원천 차단해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자활지원금의 의의를 강조한다. 연구 결과와 현재 시행 중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금이 제도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낮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님

근거 출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및 전주시 사례, 신라대 최희경 교수 연구, 현장 목소리, 전문가 및 담당자 의견

TK,
정말 홀대받고 있습니까?

'Why can O'
(김서현, 손윤경, 조현영, 노재언) 제2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대상 수상작

검증 대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구 패싱(TK 홀대론)" 관련 발언

· 발언 1: 2020년 대구 국비 예산 정부 반영액이 요청액의 80.9%(2조 7,861억 원)뿐이다

· 발언 2: 타 광역단체는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한 금년 예산은 대구만 줄었다

선정 이유

· TK 홀대론이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서 빈번하게 언급되지만, 정작 지역 언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음

·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정치적 프레임을 팩트체크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예산 정보를 전달하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함

검증 방법

데이터 비교, 정보공개청구, 기사 분석, 심층 인터뷰

검증 내용

"작년에 편성한 금년 예산, 대구만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건 경제보복이죠. (현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도 대구시에서는 3조 4418억을 요청했답니다. 근데 지난 5월말까지 각 부처 반영액을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요청한 것에 80.9퍼센트, 2조 7,861억원, 이것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대구패싱이라는 말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1)]

그림 1 〈대구시 연도별 국비 예산 현황〉

연도	신청안	정부안	최종액	정부안/신청안 반영 비율
2014	3조 4,423억	2조 9,540억	3조 1,293	85.8%
2015	2조 4,334억	3조 798억	3조 2,247억	126.6%
2016	3조 5,228억	3조 2,428억	3조 3,432억	92%
2017	3조 5,661억	3조 554억	3조 1,584억	85.7%
2018	3조 4,215억	2조 8,885억	3조 43억	84.4%
2019	3조 3,014억	2조 8,902억	3조 719억	87.5%
2020	3조 4,418억	2조 8,969억	미정	84.2%

지난 7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제 살리기 토론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구에 편성되는 국비 예산을 줄여 의도적으로 대구를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의 발언 이후 국비를 둘러싸고 지역 여야 정치권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7월 17일 "황교안 대표는 가짜뉴스로 대구·경북민을 현혹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해 반박했다. "대구광역시는 작년 12월 7일 '10년 연속으로 국비 3조원 이상 확보 목표를 달성했고, 최종 확보액은 3조 719억원으로 전년대비 676억원 증액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황 대표의 발언이 팩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도 7월 21일 성

1) [희망공감 국민속으로] 황교안 당대표 대구경제살리기 토론회 참석, '오른소리' 유튜브 채널, 2019.7.16, 2019.9.2.접속, https://www.youtube.com/watch?v=_jcL-TwrEUw

명을 발표해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황교안 대표는 분명 정부 반영액을 기준으로 대구예산 홀대라 주장했다"며 "문 정부의 대구에 대한 인식은 정부안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황 대표가 언급한 '대구 패싱'은 사실일까? 취재 결과, 패싱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황 대표의 발언 후 한 달 간 관련 기사가 줄을 이었으나, 조사한 지역언론 중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검증한 언론은 없었다. TK(대구경북) 홀대(패싱)론과 이를 검증하지 않는 지역언론. 단순히 올해 7월에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닐 것이라는 예상으로, 근 6년간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TK 홀대론 관련 기사 235건을 웹크롤링한 후 분석을 시도했다. TK 홀대론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하지 않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지난 5월말까지 각 부처 반영액을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요청한 것에 80.9퍼센트, 2조 7861억원, 이것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라는 발언, 사실일까?

▶ **검증 결과** 수치 자체가 다르다

국비예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① (신청안) 각 시도별로 필요한 내년 국비 예산을 정부에 요구한다.

② (정부 반영안) 8월경 신청안에 대해 각 사업별 관련 정부 부처가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집계된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이 정부 반영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최종 예산) 국회는 심의,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가감한 후 국비를 최종 확정한다. 우선 황 대표의 "80.9퍼센트, 2조 7,861억 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발언의 경우, '대구시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비 예산 현황(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 '2조 7,861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당 대구시당의 주장대로 황대표가 2020년 정부안 기준으로 발언한 내용이라 가정하더라도, 대구시가 밝힌 2020년 대구시 국비예산의 정부안은 2조 7,861억 원이 아닌 2조 8,969억 원이므로 황대표의 주장과는 다르다. 즉 2020년 대구시 신청안 대비 정부안 반영 비율은 황 대표가 주장한 80.9%가 아니라 84.2%다. 2017년 반영 비율이 85.7%, 2018년에 84.4%, 2019년에 87.5%였던 것을 보면 단순히 '대구패싱'이라고 규정하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한 금년 예산 우리만 대구만 줄었다"는 발언, 사실일까?

▶ **검증 결과** 국비 예산 산출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단순 액수 비교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대구'만' 줄었다고 할 수도 없다.

타 광역자치단체 국비예산과의 비교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보공개포털(open.co.kr)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2014~2020년 연도별 국비 예산 자료를 청구했다. 9월 2일~9월 20일 간 자료를 공개한 시도는 총 17곳 중 16곳이었다. 부산광역시는 '담당자의 국비 확보 관련 국회 출장'을 사유로 연장 통지를 했다(10월 2일 공개 예정).자료를 공개한 시도에 한해 국비 예산 비교를 시도했다. 그러나 비교에 앞서, 각 시도가 공개한 금액 간에 단순 비교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산 책정 기준이 각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표 1 참조〉

표 1 〈광역자치단체별 2014년~2020년 국비 예산 신청안·정부 반영안·최종 예산 (억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자체신청안	서울	59,945	47,502	38,834	48,460	57,665	69,334	78,219
	부산							
	대구	33,423	24,334	35,228	35,661	34,215	33,014	34,418
	인천	20,330	20,835	21,208	21,286	23,034	27,619	32,217
	광주	20,063	21,006	21,249	21,923	24,730	23,716	26,627
	대전	26,370	29,400	30,140	31,775	32,882	35,200	38,035
	울산	68.30	73.02	96.85	95.86	118.42	123.48	140.03
	세종	2,768.42	2,846.03	3,500.78	3,873.39	4,310.84	4,675.22	6,015.24
	경기			80,667	81,250	83,415	100,510	122,195
	강원	51,820	61,800	64,200	62,000	54,200	62,262	69,700
	충북	44,764	49,561	53,164	56,266	62,375	69,035	73,231
	충남	40,200	40,700	44,650	52,864	56,000	63,000	67,600
	전북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전남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미집계
	경북	65,041	71,249	73,108	81,073	69,596	54,643	57,180
	경남	39,644	45,483	47,520	46,695	47,680	50,072	56,341
	제주	15,919	17,097	16,275	16,128	16,287	16,119	16,725
정부반영안	서울	31,661	31,525	34,308	36,676	45,449	52,910	미정
	부산							
	대구	29,540	30,798	32,428	30,554	28,885	28,902	28,969
	인천	19,062	20,079	20,156	19,595	22,903	27,345	
	광주	15,304	16,086	16,675	17,664	17,803	20,149	22,205
	대전	20,324	23,520	25,020	26,347	27,940	30,022	33,335
	울산	69.44	80.14	74.81	69.84	105.24	115.25	118.62
	세종	1,816.27	2,238.71	3,054.00	3,430.00	3,726.00	3,698.00	4,803.68
	경기	54,958	64,577	66,904	70,246	77,799	92,232	미정
	강원	50,254	60,200	62,700	60,100	52,750	59,461	67,295
	충북	38,839	42,905	44,880	47,593	50,446	52,764	59,218
	충남	39,306	41,110	42,522	51,574	56,394	61,735	69,528
	전북	57,613	57,790	57,185	58,577	60,715	65,113	70,731
	전남	47,230	49,918	53,502	55,480	55,033	61,041	67,261
	경북	47,554	52,706	55,929	50,447	32,474	32,202	40,549
	경남	33,855	37,873	39,887	41,736	45,980	48,885	55,392
	제주	11,382	12,400	12,200	12,698	12,925	13,340	14,249
최종예산	서울	30,798	35,911	37,940	42,660	48,278	56,750	(미정)
	부산							
	대구	31,293	32,247	33,432	31,584	30,043	30,719	
	인천	19,946	20,338	20,467	19,688	23,088	27,479	
	광주	15,649	16,584	17,332	18,292	19,743	22,102	
	대전	21,147	23,700	25,309	26,477	28,200	30,611	
	울산	70.63	82.71	78.90	85.35	114.77	116.79	
	세종	2,044.10	2,526.11	3,061.74	3,429.72	3,597.76	3,817.17	
	경기	54,958	64,577	66,904	70,246	77,799	92,232	
	강원	50,525	60,715	63,028	60,572	53,025	60,878	
	충북	40,641	43,810	45,897	48,537	51,434	54,539	
	충남	40,325	43,355	47,498	53,108	58,104	63,863	
	전북	61,131	60,150	60,568	62,535	65,685	70,328	
	전남	47,989	53,247	55,884	60,205	60,016	68,104	
	경북	49,069	53,893	57,033	51,474	35,132	36,154	
	경남	34,886	38,427	40,190	42,449	45,666	50,410	
	제주	11,342	12,025	12,447	12,657	12,723	13,572	

울산광역시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예산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은 해당 자료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 경우, “중점관리건의사업 대상으로 작성, 소규모 국비지원사업은 제외했으며 경북 세입세출예산서 상의 국비와는 상이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일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두고 국비예산액을 산출한 것이다. 즉, 각 지자체 간 직접적인 국비 금액을 비교할 수 없다.

특히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공개한 자료에 대해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은 포함돼 있지만, 의무복지비용, 교부금, 내국세(소득세 등)은 산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개한 자료 내 ‘의무복지비용’ 예산 포함 여부를 각 시도에 추가 확인해봤다. 확인 결과, 16개 시도 중 대구, 경북은 국비 예산 산출 시 의무복지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외 일부 시도에서는 의무복지비용 포함 여부를 알기 어렵거나, 복지예산 중에서도 국비로 집계하는 항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 전 한국당 대구시당대표)은 “전액국비사업, 국가보조금,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상황에 따라 국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며 “지자체의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예산 담당자 또한 “국비 예산 산출 시에 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국비 예산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축소하거나 아예 제외해서 발표하는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른 광역단체들은 다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에 편성한 금년 예산 우리만 대구만 줄었다”는 발언은 사실 확인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림 2 〈네이버 뉴스 ‘대구, 국비, 홀대’ 검색 시 시기별 기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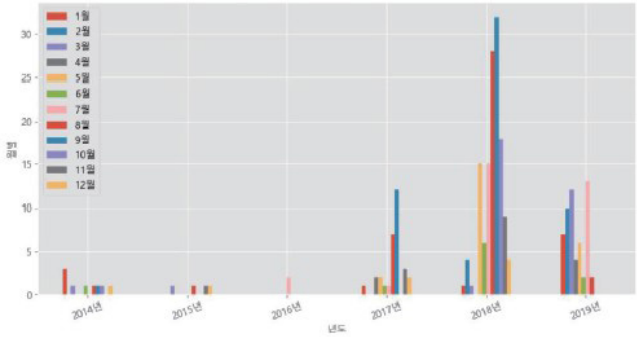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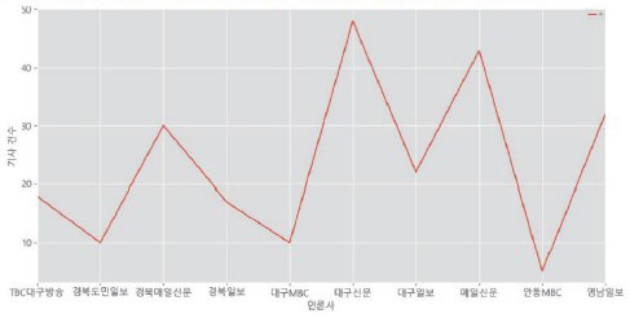


그림 3 〈네이버 뉴스 ‘대구, 국비, 홀대’ 검색 시 지역언론사별 기사 건수〉



TK 홀대론, 과거부터 계속 거론됐다

그럼에도 황 대표의 ‘대구 패싱’ 발언은 언론을 통해 계속 확산됐다. 대구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지역언론들 또한 국비 예산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 그렇다면 언론은 왜 간단한 사실마저 확인하지 않았을까. TK 홀대론이 등장한 시기가 이번 뿐만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관련 기사를 분석해봤다. 그 결과 TK 홀대론과 이를 검증하지 않는 지역언론, 이 두 가지가 과거부터 반복된 패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K 홀대론 관련 기사, 2018년에 집중

우선 ‘대구 홀대’를 포함한 ‘TK 홀대론’ 또는 ‘TK 패싱’이 이번 황 대표의 발언 이전에도 지역언론, 정치권에서 빈번하게 언급돼 왔다는 사실을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2〉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2]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에서 ‘대구, 국비, 홀대’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집계된 뉴스 기사 건수를 시간 순으로 표현한 그래프다. 검색 대상 언론은 ‘대구경북기자협회’ 소속 언론사 총 14개 중 1) 네이버에서 검색을 지원하고 2) 통신사 제외 3) 검색시 관련 뉴스 보

2) 2010~2013년 간은 검색되는 기사 건수 자체가 적고(총 16건), 직접적인 ‘TK 홀대론’이 언급된 기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집계했다.

TK,
정말 홀대받고 있습니까?

'Why can O'
(김서현, 손윤경, 조현영, 노재언)

도가 확인되는 10곳(TBC대구방송,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대구MBC, 대구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안동MBC, 영남일보)으로 한정했다. Python 프로그램으로 웹크롤링 코드로 기사를 수집한 결과, 총 기사 건수는 235건이었다.

'대구, 국비, 홀대'에 대한 관련 기사 건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2018년 8월과 9월로, 235건의 기사 중 26%(60건)가 이 시기에 집중돼 있다. 언론사를 기준으로도 기사를 분석해봤다. 〈그림 〉>은 지역언론사별 기사 건수 추이를 표현한 그래프이다. 기사 235건 중 대구신문이 48건, 매일 신문이 43건, 영남일보가 32건을 차지했다.

최근 6년간 'TK 홀대론' 지역언론 분석

2014~2016년까지 집계된 기사 15건 중 1건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TK 홀대론을 언급하는 기사는 없었다. 2016년 7월 경 대구·경북 영남권 신공항 무산, 사드 성주 배치 결정 후 영남일보 사설에서 "정권 창출을 주도했던 대구·경북이 이렇게 홀대받는다니 자괴감이 들 정도다"[3]라는 언급이 있다. 2017년부터는 기사 집계 건수가 31건으로 급증했다. 4월 대통령 선거기간에 접어들자 대구신문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농후한 분위기"라며 "'보수장기 집권'이란 안일함에 취해 야권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대구시 관계자)"던 까닭에, "차기 정부에서 TK가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고 봤다.[4] 5월 경북매일신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5] 8, 9월에 들어서자 당해 기사의 60%(19건)가 두 달에 쏠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반영안이 공개된 시기다. 대구경북 SOC 예산 삭감 사실과 이에 대한 지역정치권 및 지자체의 대응이 주로 보도되고 있다. 8월 경북매일신문은 타 지자체와 대구시 국비 예산을 비교하며 "대구와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표현하기도 했다.[6] 그러나 예산 삭감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만, 왜 예산 삭감이 지역차별과 TK 홀대론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보도는 없었다.

2018년은 전체 집계 기사 건수 235건 중 57%(133건)로 가장 많은 기사가 몰렸다. 연초부터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날인 8월 23일 전까지 총 45건의 기사가 보도됐다. 5월에는 주로 대구시·지역 국회의원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여당의원이 퇴장해 야당의원만으로 예산협의를 하는 파행이 빚어진 내용"이 다뤄졌다. 제7대 지방선거가 진행된 6월 13일 이후로는 '더 이상의 TK 홀대론은 없어야 된다'는 논지의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됐다.[7]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8월 28일부터는 '광주·전남에 비해 대구·경북은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훨씬 적게 배정됐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구신문은 "경북은 인구가 269만명에 예산이 3조1천635억인데 비해 전남은 인구가 경북보다 훨씬 적은 190만명에 불과하지만 내년 예산은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산술적으로 봐도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8]

다음날 29일 대구일보, 경북매일신문, 30일에는 영남일보가 같은 논리로 TK 홀대론을 보도하기시작했다. 매일신문은 "대구·경북과 달리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문재인 정권 텃밭 지역은 국비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9]

앞서 확인한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발표한 국비 규모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8년 9월 12일 제303회 경상북도의회에는 경북도청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이 "인구와 면적이 작은 전라남도가 6조 1041억 확보하였으나 (경북)도는 3조 1635억 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각 시·도별 국비 반영액을 추계하는 집계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그

3) [사설]신공항 무산-사드 배치, 대구·경북은 희생양인가, 2016.7.15.
4) "연줄 없나" 다급한 대구·경북, 2017.4.19.
5) 대구경북 국비, 새 정부 교차로 앞 '빨간불', 2017.5.26.
6) [사설]대구경북 국비예산, 국회심의서 바로잡아야, 2017.8.30.
7) 빨간불 켜진 TK 국비 확보, 여야 정치권 함께 나서라, 경북매일신문, 2018.7.9., 정부 'TK 홀대' 개선될까, 대구신문 2018.7.17., 정부 'TK 홀대' 이제는 지양해야, 대구신문 2018.7.18., 대구 ·경북 똘똘 뭉쳐 2019년도 국가예산 '패싱 막자', 경북일보, 2018.7.30.
8) "지역경제 고사 직전인데, 예산 홀대까지…", 2018.8.28.
9) [사설] 해도 해도 너무한 文정부의 대구경북 예산 홀대, 2018.8.30

럼에도 TK 홀대론은 10월 말까지 계속 이어졌다.9월 3일 대구신문은 “지역기업과 지역민들이 납부한 국세가 심각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되기보다 오히려 절반정도는 타 지역 예산으로 사용될 공산이 커진 것”이라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기사를 보도했다.[10] 여당, 야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균형적인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는 일부 있었으나[11], 적극적으로 팩트를 검증하는 언론은 없었다.

2019년(56건)에서 7월은 TK 홀대론 관련 보도가 가장 많은 달(13건)이었다. 7월 16일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대구 패싱”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7월 기사는 13건 중 12건이 빠짐없이 황교안 대표 발언과 지역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채워졌다. 7월 17일 대구MBC의 “(황교안 대표가) 지역경제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며 대구를 찾았지만 원인 진단에서부터 사실관계에 오류가 드러나면서 논란만 키운 꼴이 됐다”는 비판적 보도만이 예외였다.[12]

지역 단체장·공무원 반응, 지역언론과 온도 차 크다

TK 홀대론에 대한 대구경북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반응은 지역언론과 크게 달랐다. 단체장이 TK 홀대론 자체를 부정하거나 예산 감소의 구체적인 원인이 회의 중 밝혀지기도 했다. 아래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전자회의록에서 ‘TK 홀대’, ‘TK 패싱’, ‘패싱’ 등을 검색어로 관련 발언을 확인한 결과다.

> **황병직 의원** 우리 경상북도 R&D사업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R&D사업이.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56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 5건을 포함한 31건으로 줄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중략) 경상북도의 2019년도 정부 반영액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에 발맞춰 새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발굴하지 못했으며, 건의액도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여 경상북도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자기반성 없는 TK 패싱론은 정치적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 9월 11일 제303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회의록 발췌)
>
> 위의 경북도의회에서 황병직 의원은 경북 R&D사업 예산이 TK 홀대론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도 차원의 정부 예산편성 방향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 **강민구 의원** 담당 실에서는 예산 잘 따온다고 하는데 국비 못 따온다고 (정당들이) 자꾸 싸워가지고 참 미치게 만든다. 우리 대구사업 중 예타사업으로 해서 1조 얼마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모 일간지에서는 부산, 경남엔 4조원이 갔는데 대구엔 1조원밖에 안 왔다고 하고. 왜 자꾸 (언론에서) 예산 패싱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2019년 2월 13일 제264회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발췌)
>
> **이철우 도지사** TK 패싱이라는 말은 없다. 우리 실력이다. 예산을 못 따는 것은 (지자체에게) 실력이 없는 것이다. (2019년 6월 13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발췌)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대구시의 보고에도 정당 간 TK 홀대론을 거론하며 공방이 벌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자체 예산 확보는 지자체의 능력임을 강조하며, TK 홀대론 자체를 부정했다.

대구시 주요 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예산 홀대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봤다. 정부에서 예산을 근거 없이 삭감해 실제로 사업이

---

10) TK서 거둔 국세로 ‘남 좋은 일’, 대구신문 2018.9.3
11) 정치권 가세 ‘TK 홀대’ 논란 증폭, 대구MBC 2018.8.31.
12) 민주당 “황교안 대구홀대 주장은 가짜 뉴스”, 대구MBC 2019.7.17.

TK,
정말 홀대받고 있습니까?

'Why can O'
(김서현, 손윤경, 조현영, 노재언)

축소 또는 탈락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미래형자동차과 이윤희 주무관은 "예산이 줄어든 것이나 타격받은 것은 없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미래형자동차 사업은) 시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료산업기반과 이한겸 주무관은 "의료산업기반과는 예년대비 동일하거나 증액된 예산액을 요구한 상태로, 예산이 줄었다거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주의 너머 국비 확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해

지금까지 지역언론들의 보도 경향, 실제 지역 정치권 및 행정담당자들의 반응 등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지역언론이 국비 예산 기준에 대한 엄밀한 검증 없이 TK 홀대론을 주장하는 보도를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TK 홀대론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남재일 신문방송학 교수(경북대)는 "지역주의의 역사가 깊은 한국 사회 특성상 정치, 언론도 지역이기주의를 오랫동안 내면화 해왔다"며 "TK 패싱론과 같은 예산 분배 문제는 타 지역을 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민들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어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수 정권 하에서 우대를 받아온 대구이기 때문에 TK 홀대론은 그러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각 시도별 국비 집계 방식이 상이한 탓에 검증하기가 까다로운 것도 이러한 상황에 한몫을 한다. 그러나 지역 예산 문제는 지역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은 사안이기에 홀대나 패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역언론들이 홀대론을 꺼내들 때, 국비 사업 예산이 삭감된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좋은 보도의 예를 보여준 언론도 있었다.

대구MBC는 2018년 6월 "(대구시는) 대형 건설사업 위주로 국비 확보 전략을 짰지만, 이미 정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줄줄이 탈락한 상황"이라며 "정부정책과 눈높이를 맞춘 예산, 도심재생이나 청년 일자리 확충 같은 획기적인 방향 전환 없이 다리 놓고 길 닦는 수준의 예산 요구로는 대구시 살림살이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다. 대구시의 대응력 부족을 비판함과 동시에 국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제시한 사례다.

지역언론들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상생을 추구한다면, 앞으로 정파성에 치우친 보도를 지양하고 철저한 비교 분석과 검증을 거친 보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도, 언론에게도, 시민들에게도, 올바른 정보 전달과 공익을 위한 적극적 팩트체킹 노력이 필요하다.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님

근거 출처

대구시 연도별 국비 예산 현황, 16개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대구·경북 의회 회의록, 대구시 사업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분석

13) "대구시 국비확보 '비상'", 대구MBC, 2018.06.19

‘권력이 된 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사 팩트체크

‘F.B.I(권민선, 김용헌, 송승섭)’ 제3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대상 수상작

검증 대상

“정부지원 NGO 60%, 親與[친여] 위주 물갈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2020년 6월 8일)

선정 이유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현 정권에서 친여·진보 성향 시민단체 지원은 늘고 보수 단체는 배제됐다는 기획 보도를 일제히 내보내며 정부 비판에 나섰다. 해당 보도 중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이뤄졌으나, 실제로 시민단체 대거 물갈이나 지원금 몰아주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부족했다.

검증 방법

공식 문서 분석, 시계열 비교, 객관적 분류 기준 수립, 교차 검증, 직접 취재

검증 내용

지난 6월 조선일보에서는 <권력이 된 시민단체>라는 기획보도를 냈습니다. 관련 기사들은 모두 현 정권에 시민단체 출신이 많고,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지원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대개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일제히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정부를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를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기획 보도에서 일부오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기사에 허점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가 받아들여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대거 물갈이했는지, 비슷한 성향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줬는지는 뚜렷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팀이 ‘정부지원 NGO의 60%가 친여 위주로 물갈이 됐다’는 조선일보의 기사*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8/2020060800088.html 내용을 검증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검증 내용

“정부지원 NGO 60%, 친여 위주로 물갈이 됐을까?”

- 문재인 정부 3년만에 정부 지원 시민단체의 64% 이상이 교체됐다?
- 2020년 신규 지원 단체에는 진보·친여 성향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배제됐다?

F.B.I 팀은 조선일보의 6월 8일 자 1면에 실린 <정부지원 NGO 60%, 친여위주 물갈이> 기사를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가 친여·진보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는 주장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 있어서다. 기사 본문에서는 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정부 지원 시민단체가 64%나 교체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교체된 신규 지원 단체 대부분이 진보·친여 성향 단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세 가지 논거를 검증하며 진짜 정부 지원 NGO가 친여 성향 위주로 물갈이됐는지 확인해봤다.

문재인 정부 3년만에 정부 시민단체의 64% 이상이 교체됐다? → 대체로 사실 아님

7일 본지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시민단체 223곳 가운데 3년 전에도 선정됐던 단체는 80곳(35.9%)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정부 지원 시민단체의 64% 이상이 교체된 것이다. 올해 시민단체 국

자료1) 조선일보는 6월 8일자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3년만에 시민단체 64%가 교체됐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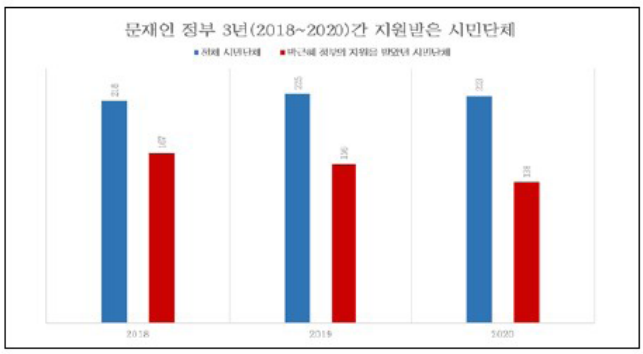
연도	사업명
2014	HOPE Massage Training Course Program for the blind
2015	스리랑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식 안마교육과 오디오북 및 점자달력 배포 사업
2016	'Sky of Joy' 시각장애인 안마 중급교육, 네팔 시각장애아동 작은예술단 창단 및 구호
2017	X
2018	스리랑카 시각장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2019	시각장애인 문화 및 신체역량 강화프로그램
2020	시각장애인 신체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료2) 2014년~2020년 사단법인 새빛이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

조선일보는 정부 지원 NGO가 친여 위주로 물갈이됐다는 근거로, 2017년과 2020년의 자료를 비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223곳 중에서, 2017년에 선정됐었던 단체는 80곳(35.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년 만에 정부가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대폭(64% 이상) 교체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확인 결과 2020년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중 2017년에도 선정됐던 단체는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35%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를 물갈이라고 표현할 만큼,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를 교체했다고 보긴 어렵다. 조선일보는 2017년과 2020년의 특정 시점만을 비교·분석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 전체(2014~2017)를 살펴보면 결과는 달라진다. 2020년 지원을 받은 223곳의 시민단체 중 박근혜 정부가 한 번이라도 지원했던 곳은 137곳이다. 즉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시민단체의 절반 이상(61%)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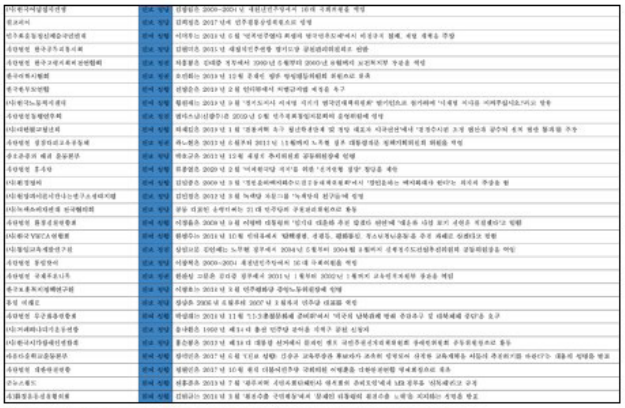
사단법인 '새빛'이 대표적인 예다. 새빛은 2011년에 세워진 국제시각장애인 구호단체다. 해당 단체는 2014년 '시각장애인 안마교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을 타냈다. 이후 2017년, 딱 한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의 단순 비교로 새빛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물갈이해 선정한 단체가 됐다. 해양구조협회도 마찬가지다. 이 협회는 2014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바다!'라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원금을 타냈다.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하다 2020년 새로운 사업으로 정부 지원 시민단체에 선정됐다. 해당 협회는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교체해버린 시민단체에 포함됐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는 2018년에 76%, 2019년에는 69%에 달한다. 2017년만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교체한 '신규'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공익성을 인정해 지원했던 단체들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시민단체의 64%를 교체해버린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들을 상당수 재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사 단순 비교한 60% 이상의 교체 비율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물갈이로 표현할 만큼 이례적인 수치는 아니다. 원래 정부 지원 시민단체는 매년 30%가 넘게 바뀌기 때문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중에서 36%는 2015년 예산을 타지 못했다. 2015년 예산을 받은 단체의 48%도 다음 해 정부 지원금을 수주하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19년엔 36%가 교체됐고, 2020년에는 33%가 바뀌었다. 이렇게 새롭게 선정되는 시민단체는 매년 평균 38%다. 약 3년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2017년에 비해 64%가 새로운 시민단체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3년 만에 60%가 넘는 정부 지원단체를 교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지원한 시민단체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 정부가 지원했던 기존 시민단체들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단체 교체율이 매년 평균 38%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3년 만에 64%의 시민단체가 교체된 것을 두고 물갈이로 표현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정부 시민단체의 64% 이상이 교체됐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자료3) 문재인 정부 3년(2018년~2020년)간 지원받은 시민단체를 살펴본 결과 최소 절반 이상이 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4) 2020년 신규단체 중 반여·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시민단체



자료5) 2020년 신규단체 중 친여·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시민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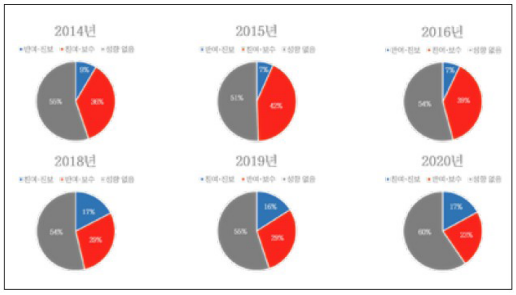
* 진보(보수) 정권과 관련되어 있음: 진보(보수) 정당/ *문재인(박근혜) 대통령 후보지지: 문(박) 지지

* 진보(보수) 정당과 관련되어 있음: 진보(보수) 정권/ *친여(반여) 성향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친여(반여) 성향

2020년 신규 지원 단체에는 진보·친여 성향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조선일보는 '신규 단체에는 진보·친여 성향 단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주장도 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규 단체가 친여·진보 성향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직접 확인한 결과 신규 단체가 대부분 친여·진보 성향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2017년 대비 2020년 신규 시민단체는 총 144곳이다. 이중 친여·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단체가 포함된 건 사실이다.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장은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고, 사단법인 흥사단의 대표 류종열씨는 미래한국당 저지 등을 위해 진보 세력에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친여·진보 단체는 총 30곳 뿐이었다. 신규 시민단체의 20%로 '다수'로 보긴 어렵다. 게다가 여당에 적대적이거나 보수 성향을 드러낸 시민단체도 23곳으로 15%를 차지했다. 친여·진보 성향 단체보단 적지만 상당수 포함된 셈이다. 사단법인 사회정상화운동본부도 2020년 신규단체에 이름을 올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다. 해당 단체를 이끄는 김두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감찰 1팀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한국장애인총연합회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야합했다고 비판한 평화문제연구소도 올해 정부 지원금을 타냈다.



자료6) 연도별 시민단체 정치성향 비교. 퍼센티지는 반올림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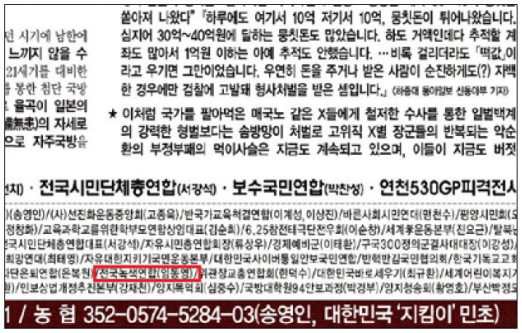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에서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고,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배제됐다?

→ 대체로 사실 아님

비단 2020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분석하면 어떨까.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현 정부 들어 친여·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서 상당수 배제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시민단체를 모두 분석해봤다. 2018년 정부와 가까운 친여·진보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총 38개로 전체의 17% 수준이었다. 2019년엔 36개로 16%, 2020년에는 38개로 17%의 비중을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진보 단체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5개, 2015년 15개, 2016년 16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를 지원했다. 비율로 따져도 매년 9%, 7%, 7%로 문재인 정부의 절반 수준이다.

‘권력이 된 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사 팩트체크

‘F.B.I(권민선, 김용헌, 송승섭)’


쏟아져 나왔다」 『하루에도 여기서 10억 저기서 10억, 공짓돈이 튀어나왔습니다. 심지어 30억~40억원에 달하는 공짓돈도 많았습니다. 하도 거액인데다 추적할 계좌도 많아서 1억원 이하는 아예 추적도 안했습니다. … 비록 걸리더라도 「떡값」이라고 우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우연히 돈을 주거나 받은 사람이 순진하게도(?) 자백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셈입니다.』 (하종대 동아일보 선임대부 기자)

★ 이처럼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 같은 X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의 강력한 형벌보다는 솜방망이 처벌로 고위직 X별 장군들의 반복되는 악순환의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이 지금도 버젓

전국시민단체총연합(서강석) · **보수국민연합**(박찬성) · **연천530GP파격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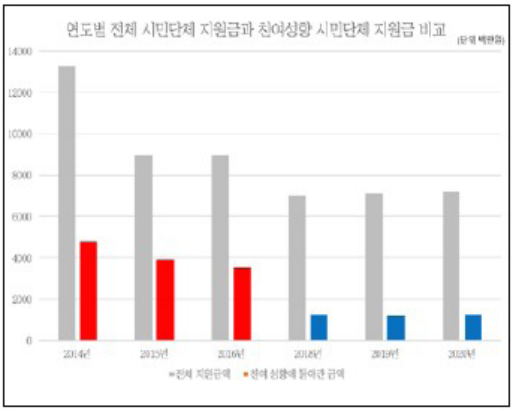
1 / 농 협 352-0574-5284-03(송영인,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

자료7) 2015년 3월 19일 문화일보에 실린 성명. 제목은 <박근혜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있잖아요!> 2018년부터 매년 정부 지원을 받았던 녹색전국연합(당시 전국녹색연합)이 성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통계를 친여(親與) 위주 물갈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긴 어렵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정부 성향과 유사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관행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원한 친여·보수 단체는 2014년 106개, 2015년 95개, 2016년 87개였다. 매년 36%, 42%, 39%의 친정부 성향 단체가 박근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3년간 지원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는 평균 16%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39%에 달했다. 이를 생각하면 정권과 성향이 비슷한 친여 시민단체는 오히려 3배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기사에선 곽노현 전 교육감이 운영한 시민단체나, 흔히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언론연합의 선정만 두드러졌다. 동시에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단체장이 보수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경우에도 폭넓게 지원을 받았다.

2020년 ‘불법간판 근절 프로젝트 우리동네 바른간판콘서트’라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사단법인 뉴라이트가 이름을 바꾼 단체다. 단체장은 초대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진홍 목사가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비난해왔다. 2015년 이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불법 간판을 근절한다는 취지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이념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데 성공했다.

매년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은 녹색전국연합(구 전국녹색연합)도 마찬가지다. 임동영씨가 대표로 있는 해당 단체는 2015년 3월 <박근혜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있잖아요!>라는 연합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간첩잡자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때 없어졌다’며 이전 진보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이력이 있다. 정부 지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으로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끊지 않았다. 환경 보전사업을 펼치는 단체의 공익성을 인정해서다. 2018년에는 3천만 원, 2019년에는 4천2백만 원, 2020년에는 4천4백만 원을 받았다.



자료8) 연도별 시민단체 정치성향 비교. 퍼센티지는 반올림해 적용

보수·야당 정치인들이 단체장 또는 이사장으로 재임한 시민단체도 대거 지원을 받았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2010년 “성남의 박근혜”가 되겠다며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인물이다. 19대 국회서 새누리당 3선 의원으로 활동한 황진하 전 의원과, 현재 국민의힘 재선 의원인 한기호 의원이 이끄는 단체도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 성향에 가까운 단체들이 지원금을 몰아 받는 현상도 문재인 정부 들어 완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총 48억여원을 친여 성향의 단체에 지원했다. 총 지원금액의 36%다. 2015년엔 38억 9천만원으로 43%를, 2016년엔 35억 3천만원으로 39%를 친여·보수 성향의 단체에 지급했다. 반면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총 지원금의 17%인 12억 5천만원을 친정부 성향의 단체에 줬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가 받는 지원금은 2019년 11억 9천만원, 2020년 12억 5천만원으로 줄었다.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16%, 17%로 감소했다.

판정: 정부지원 NGO의 60%가 친여 위주로 물갈이 됐다? → '대체로 사실 아님'

문재인 정부가 3년 만에 60% 이상의 시민단체를 교체해버린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다. 또 신규 단체 대부분이 친여·진보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의 주장도 대체로 사실과 달랐다.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봐도 친여·진보 성향의 단체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고, 보수 성향 단체가 배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 지원 NGO의 60%가 친여 위주로 물갈이됐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님

근거 출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현황, 단체 성향 분석 데이터, 정권별 친정부 단체 지원 비율 비교, 개별 단체 사례

국적법 개정안을 향한 의혹, 과연 사실인가?

'팩트헌터스'

제4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대상 수상작

검증 대상

국적법 개정안(영주권자 자녀 국적취득 제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

· 의혹 1: 중국 혹은 조선족에게만 유리한 특혜 법안인가?

· 의혹 2: 대상자들이 내국인에 비해 의무는 적고 혜택(건강보험, 세제 등)만 과도하게 누리는가?

· 의혹 3: 해당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는가?

선정 이유

· 개정안 발표 후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31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반응이 매우 냉담했음

· 반대 여론의 주된 이유가 반중 정서와 단일민족주의에 기인하여 감정적 접근이 만연한 상태였음

· 기존 언론 보도가 단순히 논란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쳐, 객관적인 정보와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주제로 선정함

검증 방법

공식 자료 분석, 정보공개 청구, 전문가 인터뷰, 해외 사례 분석, 법령 검토

검증 내용

지난 4월 26일, 법무부가 국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공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보충적 출생지주의에 기반을 둔 간이국적취득 제도와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미래 인적자원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안을 향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본 기사는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검토할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국적법 개정안의 '직접 대상자'와'간접 대상자'를 구분하고자 한다. 직접 대상자는 국적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자를 의미한다. 간접 대상자는 직접 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는 부모이며 영주자격을 지닌다.

첫 번째로,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 혹은 조선족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진행된 공청회에서 국적법 개정안 직접 대상자의 95%가 중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영주권자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렇다면 개정안이 과연 중국을 겨냥해서 발의된 법안인지 알아보자. 2010년 이후로 국내 영주 자격 소지자 중 중국계의 비율은 매해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영주권자의 약 80%가 중국 국적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직접 대상자의 95%가 중국 국적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계 영주권자의 비율이 타 국적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 당국의 개정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자. 중국 헌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중국은 민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국적법 개정안의 직접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중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온전히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보다 중국 국적을 포기할 정도로 한국과 유대가 깊은 사람들이 간이 귀화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정일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의하면 중국은 소수민족 동화를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법 개정안은 이에 반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와 유대가 깊은 조선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조선족의 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고, 이는 민족 단결 및 동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관과 배치된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이 중국 당국이나 조선족 영주권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로, 국적법 개정안의 직접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의무를 적게 부담하는지 검토해보자. 소득세법 제3조에 의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조 의2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혹은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다. 그리고 국적법 개정안 제2조의2에 의하면 국적법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주자

로 분류되는 국적법 직접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다음으로, 국적 이탈을 통한 병역 회피의 가능성을 확인해보자. 국적법 개정안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적법 직접 대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도의 3월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르면 3월이 지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주된 생활 근거가 외국에 있는 경우. 두 번째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 번째로 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가 그러하다. 국적법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개정안 대상자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출생자녀이다. 따라서 직접 대상자는 국적 이탈의 근거 중 하나인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과 법무부 국적과에 따르면 외국 주소 보유 조건은 단순히 외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해야 하고 국적 이탈의 신청도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접 대상자는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 자이므로 직접 대상자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 살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적법 직접 대상자는 주된 생활 근거를 한국에 두고 국내에서 출생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근거하여 국적을 이탈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세 번째로, 국적법 개정안의 간접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우선, 건강보험이 당기순손실을 이어 나간 것은 맞다. 하지만 이것이 국적법 개정안 간접 대상자 혹은 그 가족 구성원의 무임승차로 인한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영주권자를 지닌 외국인과 재외국민만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아가 장기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직장대상자의 피부양자수가 최근에 급증했다는 주장도 검토해보자. 먼저, 재외국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최근 2년 동안 7,489명에서 6,616명으로 감소했다. 물론, 2019년에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가 전해 대비 181,227명에서 193,066명으로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해 외국인 직장 가입자 수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직장 가입자 수의 전해 대비 증가율은 8.23%로 피부양자가 기록한 6.53%보다 높다. 따라서, 외국인 피부양자 수가 단순 증가했다는 것만을 근거로 무임승차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자산 취득이 내국인에 비해 용이하다는 주장이 있다.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이 자국이나 글로벌 은행 대출을 이용해 투자하는 것은 제한하지 못한다. 따라서 영주 자격을 지닌 국적법 개정안 간접 대상자는 타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모두가 동일하게 납부한다. 이제, 영주 자격을 지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세금에 있어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타당한지 알아보자. 먼저, 국적법 개정안 간접 대상자는 F-5 비자를 가지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과세 특례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허용한다. 이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 항의 적용에서 벗어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듯 근로소득 세액 공제에서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 사뭇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를 포함하여 소득·세액 공제의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에 오랜 기간 체류해도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국적법 개정안의 간접 대상자가 내국인에 비해 유리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힘들다.

마지막으로, 국적법 개정안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대응책인지 알아보자. 법무부 보도자료에는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사례를 통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충적 출생지주의 모델을 연구한 논문이 제시되어있다. 그런데 독일은 개정 국적법 도입 이후, 20년 동안의 평균 국적취득자수가 초기 예상 수치보다(한 해 당 100,000명) 월씬 적은 34,649명을 기록했다. 프랑스의 경우, 터키인 2세를 중심으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향한 의혹, 과연 사실인가?

'팩트헌터스'

해 평균 100명 정도가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뿐 아니라 가족 수당, 여성 노동 활성화 정책과 같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병행해오고 있다. 게다가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보충적 출생지주의 도입에는 귀화정책,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제시한 정책대상자 수만큼 인구가 유입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법무부는 간이귀화제도 개정 시의 귀화 대상자는 3,900여 명이고, 매년 약 600~700명씩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경제활동인구의 5%를 해외에서 충원하는 경우 내국인 인구감소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2021년 7월 기준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인구는 약 2,856만 8천 명이고, 이에 5%는 약 142만 명이다. 그러나 귀화 대상자의 수(정책 시행 시 3,900명, 매년 600~700명 추가 예정)는 해당 규모보다 훨씬 적으므로 노동력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제시한 국적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국적법 개정안 대상자 수도 노동력 관점에서는 부정확하다. 이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시차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귀화 대상자가 모두 노동력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정책대상자들은 귀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일 뿐, 실제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님

근거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 건강보험 주요 통계, 독일 연방 통계청 자료

미군기지 환경오염 팩트체크

'FACTPHILES'
(라유빈, 김성아, 이윤미, 임채린) 제5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대상 수상작

검증 대상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위험성이 사실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중앙일보 사설)

· 세부 검증 항목 1: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가?

· 세부 검증 항목 2: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도는 미국 기준으로는 정화 대상이 아닌가?

· 세부 검증 항목 3: 주민들에게 특이 증상이 없으므로 안전하며, 잔디 덮기 등으로 충분히 조치 가능한가?

선정 이유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임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환경 단체의 반발과 오염 논란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식 보고서의 오염 수치와 이를 '오해'라고 주장하는 언론 사설 간의 간극이 커서, 실제 안전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체킹이 필요했다.

검증 방법

공식 보고서 분석, 법적 기준 검토, 비교 분석

검증 내용

[한국] 토양오염우려기준 (mg/kg)

	1지역
카드뮴	4
구리	150
비소(Arsenic)	25
수은(Mercury)	4
납(Lead)	200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5
아연(Zinc)	300
니켈	100
불소	400
유기인화합물	10
폴리크로리네이티드페닐(PCB)	1
시안	2
페놀	4
벤젠	1
톨루엔	20
에틸벤젠	50
크실렌	1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벤조(a)피렌	0.7
1-2-디클로로에탄	5
총22개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다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환경오염(토양오염)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1]의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센터에서 제공하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사용하며 오염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을 포함한 총 23개이다. 용산공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1지역에 포함되므로 1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기준치로 사용해야 한다. 용산공원에서 검출된 물질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불소,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조(a)피렌으로 검출 지역은 B1구역, B2구역 및 사우스포스트이다.

미국은 주별로 토양오염기준이 상이한데, 그 중에서 뉴욕[2], 뉴저지[3], 메릴랜드[4]의 토양오염기준을 조사해보았다. 미국의 토양오염기준 물질은 한국에 비해 종류가 다양한 편으로 단순히 오염물질의 개수로만 비교한다면 미국의 토양오염기준이 한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기준 물질의 개수의 많고 적음을 통해 토양오염기준의 엄격함을 가리는 단순 비교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어질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토양오염기준 물질의 기준치는 한국이 더 높은 물질도 있으며, 미국이 더 높은 물질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5]의 환경성 제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일본은 오염물질 기준 단위가 mg/kg와 mg/liter로 다르기에 한국 기준치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단순 개수만으로 비교하자면 일본의 오염 기준치 제시 물질이 한국에 비해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토양지하수과), 2022. 1. 21.
2) "6 NYCRR PART 375 - Environmetal Remediation Program, Subparts 357-1 to 375-4 & 375-6", 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2006. 12. 14.
3) "N.J.A.C. 7:26D, REMEDIATION STANDARDS", New Jersey Gov., 2021. 5. 17.
4) "CLEANUP STANDARDS FOR SOIL AND GROUNDWATE", State Of Maryland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18. 8.
5)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for Soil Pollutio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Government of Japan

[미국] 뉴욕주

비소	13
바륨	350
베릴륨	7.2
카드뮴	2.5
chromium, hexavalent	1
chromium, trivalent	30
구리	50
사이안화물	27
납	63
managenese	1600
수은	0.18
니켈	30
셀레늄	3.9
은	2
아연	109
불소	30
PCB	0.1
페놀	0.33
벤젠	0.06
톨루엔	0.7
에틸벤젠	1
크실렌	0.26
벤조피렌	1
1-2-디클로로에탄	0.02
총83개	

총83개의 토양 오염 기준 물질 중 한국의 토양 오염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의 기준치만을 가져옴

[미국] 뉴저지 (mg/kg)

Table 3. Soil Remediation Standards for the Inhalation Exopsure Pathway-Residantial

	Reporting Limit
카드뮴	0.5
구리	1
비소	0.5
수은	0.1
납	0.5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기준치 없음
아연	1
니켈	0.5
불소	0.17
유기인화합물	기준치 없음
폴리크로리네이티드페닐(PCB)	0.03
시안	기준치 없음
페놀	0.33
벤젠	0.005
톨루엔	0.005
에틸벤젠	0.005
크실렌	0.00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준치 없음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05
벤조(a)피렌	0.17
1-2-디클로로에탄	0.005

한국의 토양오염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의 Reporting Limit을 가져옴

[미국] 매릴랜드

카드뮴	7.1
구리	310
비소(Arsenic)	0.68
수은(Mercury)	1.1
납(Lead)	400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
아연(Zinc)	2300
니켈	150
불소	240
유기인화합물	×
폴리크로리네이티드페닐(PCB)	0.23
시안	×
페놀	1900
벤젠	1.2
톨루엔	490
에틸벤젠	5.8
크실렌	5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4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8.1
벤조(a)피렌	0.11
1-2-디클로로에탄	0.46

soil standards residential clean-up standard (mg/kg), 한국의 토양오염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의 기준치만을 가져옴

[일본] 환경성 제시 기준

cadmium	0.1mg in sample solution
total cyanide	not detectable in sample solution
organic phosphorus	not detectable in sample solution
lead	0.01
chromium	0.05
arsenic	0.01
total mercury	0.005
alkyl mercury	not detectable in sample solution
PCBs	not detectable in sample solution
copper	125
dichloromethane	0.02
carbon tetrachloride	0.002
chloroethylene	0.002
1,2-dichloroethane	0.004
1,1-dichloroethylene	0.1
cis-1,2-dichloroethylene	0.04
1,1,1-trichloroethane	1
1,1,2-trichloroethane	0.006
trichloroethylene	0.03
tetrachloroethylene	0.01
1,3-dichloropropene	0.002
thiuram	0.006
simazine	0.003
thiobecarb	0.02
benzene	0.01
selenium	0.01
fluorine	0.8
boron	1
1,4-diozane	0.05
총29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각 국가마다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모두 다르기에 환경오염 정화 기준의 높고 낮음을 일관적인 잣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애초에 오염 기준의 역할 설정이 다르다면 수치를 통한 단순 비교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6] 예컨대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은 **Guideline**과 **Standard**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은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을 가이드라인으로 두어 토양오염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이들 국가의 토양오염기준 수치는 오염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 법적, 행정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스위스, 덴마크에서는 토양오염기준이 Standard로 사용된다. 가이드라인과 달리 스탠다드는 오염여부 판단과 관련된 행정명령 지표로 기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스탠다드 개념의 토양오염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에 따라 오염물질로 규정하는 물질과 그 기준이 상이하므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의 환경오염기준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토양오염기준으로 활용되는 물질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미국이 토양오염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현장에서 발견 빈도 수가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물질을 기준항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토양오염기준을 스탠다드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오염물질 기준항목의 개수만으로 환경오염 규제의 엄격함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결론은,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다.

1. 한국과 다른 국가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환경오염 기준 설정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단위, 오염물질 측정 방법 등이 국가별로 모두 다르기에 환경오염 정화 기준의 엄격함을 판단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2. 단순히 제시된 수치 자체만으로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비교하더라도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특별하게 엄격하지는 않다. 환경오염 정화 기준에 포함되는 오염물질 개수도 결코 한국의 기준이 많은 편이 아니며, 그 기준치도 다른 선진국이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제시된 주장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땅이 넓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인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는 미국 기준으로는 정화대상이 되지 못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일까? 이를 판정하기 위해선 먼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그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알아야 할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필자가 말하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발생한 주한미군기지가 한 두곳이 아니고, 유류 유출과 같은 환경오염 사고 역시 한 두번의 사고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주한미군기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존재하는 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한미양국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이하 LPP·2004), 용산기지 이전협정(이하 YRP·2004),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반환대상이 되는 기지만 따져보면 82곳이고,[7]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준으로 확인된 환경오염 사건만 하더라도 전국의 미군기지에서 47곳에 이른다.[8] 공간적, 시간적 방대함으

6) 정승우·안윤주·김태승, 「선진국 토양오염 기준의 역할과 기준항목 설정방법」, 『지하수토양환경』, 14권 1호, 2009, 18~28면.
7) 강혜인, 「[미군기지 반환 현주소④]방치된 기지…반환은 지연」, 『뉴스타파』, 2021. 1. 18,
8) 남종영, 「주 한 미군 환경 오염 상 습 적…'드러난 것만 ' 20년 간 47건」, 『한겨레』, 2011. 5. 22.

로 인해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은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고,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정도' 역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은 애초부터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하고자 하는 사설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최근 용산공원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논란이 주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를 미국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는 25년간 84건의 토양오염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만큼,[9] 인근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미쳐온 영향이 크며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그러므로, 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 보는 것이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한 참고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는 어떠할까? 이에 대한 자료로서 미군기지의 환경조사보고서를 한미당국이 먼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공개청구소송에 의해 공개된 자료가 존재한다.[10] 용산기지의 메인포스트 B1, B2구역과 사우스포스트 A1, A2, A4b, A4f 구역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 토양 내에 존재하는 위해물질들 중 국내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물질과 각각의 최고 농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한 수치는 아래와 같다.

물질 명	용산기지 메인 포스트 B1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1246
벤조피렌	3.399
구리	154.9
비소	767.54
납	739.5
아연	1886.7
니켈	147.2
불소	578

물질 명	용산기지 메인 포스트 B2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16,469
벤조피렌	4.432
카드뮴	8.89
구리	1,896.90
비소	138.3
납	9,632.10
아연	3,970.00
니켈	131.6
불소	581

물질 명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 A1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18,040
크실렌	26.3
구리	273.40
비소	89.14
납	1,021.90
아연	2,971.20
니켈	399.3
불소	888
수은	11.94

물질 명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 A2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988
비소	35.8
구리	229.6
납	446.1
아연	4,045.90
불소	2,571

물질 명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 A4b,f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TPH	14,651
크실렌	154.2
벤조피렌	1.004
카드뮴	5.11
구리	235.1
비소	60.66
납	222.6
아연	5363.3
니켈	191.1
불소	536

사실관계 검증을 위해선, 한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처럼 위 수치들을 토대로 비교할 미국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미국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과 같이 규제적 성격을 띠는 일관적인 기준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토양오염기준은 대표적인 오염물질들에 대한 SSL(Soil Screening Level)이다. 그러나 이는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토양에서 SSL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정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토양에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토양을 걸러내기 위해 정해진 기준치가 바로 SSL이다.[11] 따라서 SSL과 수치를 비교해 정화 대상의 여부를 판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처럼 규제적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통일된 하나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검증을 위해서는 SSL을 토대로 각 주별로 정하는 토양오염기준항목과 용산기지 토양에서 검출된 유해물질들의 수치를 비교해야 한다. 비록 이렇게 정해진 토양오염기준 항목 역시 바로 법적, 행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염 지역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정해진 복원 목표치가 비로소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위해성 평가를 위한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주가 정한 토양오염기준 항목이 사용되기 때문이다.[12]

본 팩트체크에서는 뉴욕[13], 뉴저지[14], 메릴랜드[15] 3개 주의 기준을 위 표에 제시된 물질들의 최고검출농도와 비교하여 결과를 판정하였다. 모든

9) 최나영, 「[심층기획] 용산 미군기지 토양오염, 그동안 얼마나 정화했나?」, 『뉴스펭귄』, 2022. 3. 23,
10) 강혜인, 「뉴스타파, 미군기지 환경오염 보고서 31권 '원문 공개'」, 『뉴스타파』, 2022. 4. 18
11) "Soil Screening Guidance: User's Guide", 1p, USEPA, 1996. 7.
12) 정승우·안윤주·김태승, 「선진국 토양오염 기준의 역할과 기준항목 설정방법」, 『지하수토양환경』, 14권 1호, 2009, 18~28면.

13) "6 NYCRR PART 375 - Environmetal Remediation Program, Subparts 357-1 to 375-4 & 375-6", 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2006. 12. 14.
14) "N.J.A.C. 7:26D, REMEDIATION STANDARDS", New Jersey Gov., 2021. 5. 17.
15) "CLEANUP STANDARDS FOR SOIL AND GROUNDWATE", State Of Maryland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2018. 8.

미군기지 환경오염 팩트체크

'FACTPHILES'
(라유빈, 김성아, 이윤미, 임채린)

주들의 토양오염기준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무리가 따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자의 주장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위해선 단 한 곳의 주라도 용산기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정화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주에 대한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아래는 용산 미군기지 5개 장소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의 최고검출농도 수치와 미 3개 주의 토양오염기준항목 별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의 경우는 TPH 한가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 TPH에 속하는 물질들에 대해 각각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미 3개주의 경우가 달라 비교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 후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토양오염기준 항목에서 거주지, 비거주지 용도를 구분하여 수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엔, 거주지 용도의 수치를 사용하였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의 최고검출농도가 토양오염기준 항목의 수치를 넘는 경우 주황색으로 라벨링하였다.

물질 명	용산기지 메인 포스트 B1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뉴욕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1246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벤조피렌	3.399	100	0.11	0.51
구리	154.9	270	310	3,100
비소	767.54	16	0.68	19
납	739.5	400	400	400
아연	1886.7	2200	2300	23,000
니켈	147.2	140	150	1,600
불소	578	100	240	2,400

물질 명	용산기지 메인 포스트 B2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뉴욕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16,469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벤조피렌	4.432	100	0.11	0.51
카드뮴	8.89	2.5	7.1	71
구리	1,896.90	270	310	3,100
비소	138.3	16	0.68	19
납	9,632.10	400	400	400
아연	3,970.00	2200	2300	23,000
니켈	131.6	140	150	1,600
불소	581	100	240	2,400

물질 명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 A1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뉴욕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18,040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 불가
크실렌	26.3	100	58	12,000
구리	273.40	270	310	3,100
비소	89.14	16	0.68	19
납	1,021.90	400	400	400
아연	2,971.20	2200	2300	23,000
니켈	399.3	140	150	1,600
불소	888	100	240	2,400
수은	11.94	0.81	1.1	23

물질 명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 A2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뉴욕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988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소	35.8	16	0.68	19
구리	229.6	270	310	3,100
납	446.1	400	400	400
아연	4,045.90	2200	2300	23,000
불소	2,571	100	240	2,400

물질 명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 A4b,f 구역(최고 검출 농도, PPM)	뉴욕주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TPH	14,651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비교 불가
크실렌	154.2	100	58	12,000
벤조피렌	1.004	100	0.11	0.51
카드뮴	5.11	2.5	7.1	71
구리	235.1	270	310	3,100
비소	60.66	16	0.68	19
납	222.6	400	400	400
아연	5363.3	2200	2300	23,000
니켈	191.1	140	150	1,600
불소	536	100	240	2,400

위 표를 보면, 용산기지 5개소 전체에서 오염물질들의 최고검출농도가 미 3개주 모든 곳에서 토양오염기준항목 수치를 초과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주 별로 보면, 비교적 뉴욕 주와 메릴랜드 주에서 더욱 정화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결론적으로, 용산기지의 토양오염은 미국에서도 정화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이유로 위 주장의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판정한다.

1. '주한미군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방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환경오염 정도' 역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없음.

2. 한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처럼, 행정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가졌으며, 통일된 기준이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음. 즉 '미국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

3. 위의 두 가지 한계점을 감안해서, '주한미군 환경오염의 정도'를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로, '미국 기준'을 '뉴욕, 메릴랜드, 뉴저지 3개주의 토양오염기준항목'으로 설정하고 비교하더라도 정화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해당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사용했고 거주했던 주민에게 특이 증상이 없다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잔디 덮기 등의 추가 조치를 한다면 더 안전해질 것이다

본 페이지에서는 위와 같은 필자의 주장을 두 항목으로 나누어 팩트체크를 진행한다. 첫째 항목은 "해당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사용했고 거주했던 주민에게 특이 증상이 없다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논리이며, 둘째 항목은 "잔디 덮기 등의 추가 조치를 한다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사용한 주민에게 특이 증상이 없다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는 과연 타당할까? 미군기지를 주거지역으로 사용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미국에서 파병된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가족을 동반한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16] 기갑여단의 경우 9개월 단위로 교대 배치되어 근무한다.[17]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에서 조사한 오염 항목에는 구리, 비소, 납, 니켈 등의 중금속 및 벤조에이피렌(Benzo[a]pyrene)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포함되어 있다.[18] 이 중에서 벤조에이피렌과 석유계총탄화수소의 한 부류인 벤젠에 주목해보자. 이 두 오염 항목은 국제암 연구 기관(IARC)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19] 또한 암의 발병 및 진단 시기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과 그 정도 및 검진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진단까지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 단위의 시간이 걸린다.[20] 벤조에이피렌과 벤젠을 제외한 오염 항목들로 인해 복무 기간인 3년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중금속 중독 등의 증상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고, 따라서 보고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상기한 오염 항목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질환인 암은 복무 기간 내에 진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 병사가 대한민국에서의 복무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상관관계를 단기간에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주한미군 병사의 특이 증상 보고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므로 특이 증상이 없다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논리에는 큰 비약이 있다. 이어서, 필자가 주장한 잔디 덮기 조치의 안전성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잔디 덮기 조치는 영미권에서 캐핑(capping)으로 일컬어지는 오염 토양 조치의 변형 중 하나다. 캐핑은 오염된 토양 위를 특정한 재질로 덮어 오염 물질과 인체 간의 접촉, 오염 물질들의 휘발, 강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지하수층 확산 등을 방지한다.[21] 이때 캐핑에 사용될 수 있는 재질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식물층, 모래/자갈, 지질막 (geomembrane), 점토 등이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발행한 캐핑 관련 소개에 따르면 신체에 유해한 오염 토양의 경우 그 위에 지질막, 점토, 자갈, 아스팔트 및 식물층 등을 쌓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22] 용산 미군기지 토양 중 오염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으며, 노출농도 또한 선별기준보다 높다.[23] 그러므로 신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필자가 주장한 잔디와 같은 식물층은 EPA가 신체에 유해한 오염 토양에 권고하는 캐핑 재질에 속해있지만, 식물만을 추천하지 않을뿐더러 토양 침식 방지외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잔디로 오염 토양을 덮는 것을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조치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오양 토염 위에 잔디와 흙을 덮는 방식으로 조치를 한 경우 재부유(resuspension) 현상으로 인해 토양과 공기 오염이 지속, 혹은 악화한 사례가 존재한다.[24] 재부유 현상은 토양 및 공기 중으로의 오염 물

16) 「주한미군 "2020년까지 장병 복무 정상화 완료"」, 『SBS 뉴스』, 2011. 1. 6
17) 「주한미군 순환배치 순차적 축소 거론」, 『동아일보』, 2020. 7. 20
18) 한국환경공단, 「용산 기지(사우스포스트 A4b & A4f 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뉴스타파』
19)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Agents classifi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29. [homepage on the internet] Lyon: IARC; [cited 2022 September 9; updated 2021 Sep 12]
20) Roberts, Katie. "How Quickly Do Tumours Grow?" *Cancer Research UK - Cancer News*, Cancer Research UK, 30 June 2021
21) Office of Solid Waste and Emergency Response. "A Citizen's Guide to Capping."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2
22) 위의 글
23) 한국환경공단, 앞의 글
24) "New Orleans Soil Lead (Pb) Cleanup Using Mississippi River Alluvium: Need, Feasibility, and Cost", Howard W. Mielke, Eric T. Powell, Christopher R. Gonzales, Paul W. Mielke, Rolf Tore Ottesen, and Marianne Langedal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006 40 (8), 2784-2789 DOI:10.1021/es0525253

미군기지 환경오염 팩트체크

'FACTPHILES'
(라유빈, 김성아, 이윤미, 임채린)

질재확산으로 정의되는데, 오염 물질 중 납은 특히 재부유 현상을 크게 보이는 물질로 그 재부유가 현재까지 빈번히 연구된 바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 영국 등 20세기에 납이 함유된 휘발유를 사용했던 나라들의 납 오염이다. 2006년에 미국 뉴올린스주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검출된 납의 최고농도가 5,931 mg/kg에서 19,627 mg/kg까지였던 지역에 흙과 잔디를 덮어 조치했는데, 심각한 오염도로 가속화된 재부유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산 미군기지의 메인포스트 B2 구역의 납 최고농도는 상기한 연구의 최고농도 범위에 들어가는 9632.1mg/kg이다. 그러므로 잔디와 흙을 덮는 방식으로만 조치한다면 높은 확률로 납 오염이 토양과 공기 중으로 재확산되어 신체에 유해할 것이다. 잔디를 덮는 캐핑 조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2007년 반환된 의정부의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등 5개의 미군 반환 기지들의 오염 토양에 취해진 정화 조치를 다룬 논문[25]이 2014년 발표되었다. 정화작업이 진행된 다섯 개의 반환 기지 중 캠프 라과디아의 사례가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도와 가장 유사하여 아래에 첨부한다.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mg/kg)	용산 사우스포스트 A4b A4f 구역 (mg/kg)	용산 메인포스트 B2 구역 (mg/kg)
16427	14651	16469

표 1. 각 기지에서 검출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농도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m^2)	용산 사우스포스트 A4b A4f 구역 (m^2)	용산 메인포스트 B2 구역 (m^2)
19343	14610	25430

표 2. 각 기지의 석유계총탄화수소에 의한 오염토 면적

표 1과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기지에서 검출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최고농도와 이에 의한 오염토 면적이 비슷하거나 그보다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캠프 라과디아에서는 토양경작법과 토양세척법을 사용하여 오염 토양을 정화하였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토양경작법은 오염 토양을 굴착하여 지표면에 두고 정기적으로 공기를 공급하여 토양 속 미생물에 생분해 조건을 제공하며, 이처럼 석유계총탄화수소와 같은 유기성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정화 기술이다.[26] 이어 토양세척법은 굴착한 오염 토양에 세척제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이 세척제는 오염 물질의 용해도를 높여 토양으로부터 추출 및 제거한다.[27]

본 사례는 용산 미군기지만큼 다양한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화 방식이 석유계총탄화수소에 의한 오염에 치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8]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중금속 농도 또한 안전 기준을 초과했으나[29] 본 사례의 기지들의 경우 중금속 농도는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그러므로 용산 미군기지와 완전히 비슷한 사례로 들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산기지보다 낮은 오염 수준에서도 토양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오염 토양을 굴착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용산 미군기지에 취해져야 할 조치는 간단히 잔디와 흙을 덮는 것이 아니라 오염 토양 굴착을 동반한 정화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이유로 위 주장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1. 용산 미군기지에서 검출된 오염 물질 중 1급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3년의 짧은 복무기간 동안 기지에서 거주했던 병사들에게서 보고된 특이증상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음.
2.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 토양은 잔디와 흙을 덮는 조치로는 재부유로 인한 재오염을 방지하기 어려움.

25) 양혁수 외, 「군기지 오염토양의 정화 방법에 대한 연구」, 『화학공학』 52권, 한국화학공학회, 2014, 647면
26) 토양환경센터, 「토양경작법 상세보기」, 『토양환경센터』
27) 토양환경센터, 「토양세척법 상세보기」, 『토양환경센터』
28) 양혁수 외, 앞의 글, 651면
29) 한국환경공단, 「용산 기지(메인포스트 B2 구역)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 『뉴스타파』,

검증 결과

팩트체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 대체로 거짓

국가별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이 다르고, 그에 따라 오염물질 규정 대상, 측정 방법 등이 다르므로 국가 간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토양 오염 기준이 Standard 역할을 하여 행정명령 지표로써 사용되지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토양오염 기준이 Guideline 역할을 하여 오염부지 정밀 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목적으로 활용된다. 단순히 각각의 오염물질 종류와 수치를 비교해보아도 한국의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미국의 토양오염 기준, 일본의 환경성 제시 기준에 비해 특별히 엄격하지 않다.

둘째, 미국은 땅이 넓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인지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도는 미국 기준으로는 정화대상이 되지 못한다. → 거짓

공간적, 시간적 방대함으로 인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자체가 불분명하고, 미국에는 한국의 토양오염우려기준과 같이 규제적 성격을 띠는 일관적인 기준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대표적인 오염물질ㅁ들에 대하여 SSL(Soil Screening Level)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는 Guideline의 성격을 띠며, 이를 토대로 각각의 주가 토양 오염기준항목을 정하는 방식이다. 용산기지에서 검출된 오염물질들의 최고검출농도를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3개주 토양오염기준항목과 비교해보아도, 모든 곳에서 용산기지의 오염물질 최고검출농도가 토양오염기준항목 수치를 초과한다.

셋째, 해당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사용했고 거주했던 주민에게 특이 증상이 없다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잔디 덮기 등의 추가 조치를 한다면 더 안전해질 것이다. → 대체로 거짓

주한미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특이 증상이 나타나기에 너무나도 짧고, 용산 미군기지의 오염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잔디 덮기 조치는 실효성이 적기 때문이다. 잔디와 같은 식물층은 미국 환경보호국이 권고하는 캐핑 재질 중 하나일 뿐이며, 오염된 토양 위에 잔디와 흙을 덮는 조치는 재부유(resuspension) 현상으로 인하여 토양 및 대기 오염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보다 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때도 경작법, 토양세척법 등 오염 토양을 굴착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정화작업에는 오염 토양 굴착 작업이 동반되어야 적절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근거 출처

한국환경공단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202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일보 기사, 중앙일보 사설

국내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 팩트체크

'Fact-er'
(박우석, 안혜지, 신정원, 김연수) 제6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대상 수상작

검증 대상

최근 매일경제 등에서 보도된 '노조리스크' 및 파업 피해 관련 3가지 주장
· 국내 근로손실일수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가?
· 노사리스크를 피해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가?
· 대한민국이 '파업 다발 국가'로 낙인찍혔는가?

선정 이유

· 최근 화물연대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 노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
· 일부 언론에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집중 조명하며 '노조리스크' 프레임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손실액이 과다 추산되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여 실제 피해 규모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함

검증 방법

데이터 교차 검증, 국가별 통계청 자료 확인, 경제 지표 분석, 연록 및 인식 조사 검토, 전문가 인터뷰

검증 내용

"대규모 파업이 정례화되면서 (…) 국내 근로손실일수는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한국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5.2일로 일본(0.1일)의 352배에 달했다. 이는 영국(13.4일), 독일(9.1일), 미국(8.6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길다."

위는 기사에 언급된 내용이다. 파업으로 인한 국내 근로손실일수가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높음을 이야기하며 예시로 일본, 영국, 독일, 미국 등 4개 국가를 들었다. 그렇다면 이 기사의 내용대로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정말 높은 편이 맞는지, 해당 국가들이 비교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1. 근로손실일수 정의

근로손실일수란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이다[1]. 노동손실일수라고도 칭한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손실일수=(파업기간 중 파업 참가자 수×파업 시간)÷1일 근로 시간(8시간)

이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파업 등 노사분규, 노동하지 못한 일수, 임금근로자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근로손실일수의 의미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이를 다시 8로 나눈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동향 보고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손실일수 1일 미만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란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의미한다.2)

1-2.국내 연평균 근로손실일수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10년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5.4 일이었다. 이 수치가 정확한지 따져보기 위해 직접 ILO와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자

1) 최은솔, "윤석열 정부 노사분쟁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2023.05.17

료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ILO working days lostper 1000 all countries"라는 자료에서 199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근로손실일수 수치를 볼 수 있는데, 기사에 사용된 것은 최근 10년간(2013-2022)의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의 수치만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2013~2022년 국내 근로손실일수 (출처 : ILO)

연도	근로손실일수
2013	35.1
2014	34.8
2015	23.3
2016	104.1
2017	43
2018	27.5
2019	19.7
2020	27.5
2021	22.7
2022	16
평균	35.4

이 수치들을 모두 종합해 평균을 내어본 결과 35.4일로 기사에 제시된 수치와 근소한 차이는 존재하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올해 5월 작성된 노조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자료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국제노동기구(ILO)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2~'21년) 임금근로자 천 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로, 일본(0.2일)에 비해 194.0배나 높다. 이는 미국(8.6일)보다 4.5배, 독일(8.5일)보다 4.6배 높다."

이처럼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기사에서 제시된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허위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조사하며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평균 근로손실일수와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수치가 확연히 높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2021년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사업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존재했고, 2020년과 2019년에도 조선일보[2], 매일경제[3] 등 다수의 기사에서 노동손실일수가 한국이 일본의 190~200배를 웃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4] 이를 통해 위 기사의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근로손실일수에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본처럼 원래 근로손실일수가 아주 적은 편에 속하는 국가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수치가 높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한국의 근로손실일수가 전체 국가들의 평균이나 최대치와 비교한

2) 김지영. "노사관계와 외국인직접투자."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서울
3) 석남준, "한국 노동손실일수, 일본의 209배, 독일의 10배", 2020.12.07
4) 김정환 외 3명, "툭하면 파업하는 노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2배", 2022.11.27

경우에도 높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평균 근로손실일수와 파업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근로손실일수와 관련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도 완벽하게 갖춰진 형태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0년 평균값을 연도별로 보면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일부 국가는 ILO나 OECD 등 국제기구에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2001년 자료까지밖에 없는 등이었다. 따라서 10년 평균값을 내면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최신 데이터 없이 기존에 제공된 수치 평균으로 비교되는 한계가 있다.[5]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사에서 언급된 각 나라 - 일본, 영국, 독일, 미국 - 들의 근로손실일수와 파업 형태를 조사하였다.

1-3. 일본의 근로손실일수 및 파업 형태

일본 통계청 포털 사이트 e-Stat '노동쟁의통계조사/시계열 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일본의 근로손실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지난 10년간 일본 근로손실일수의 평균은 7.7일이다. 일본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모든 노조와 조직 노동자의 90%를 차지한다. 후생노동부(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자료에 의하면 일본 노동조합의 개수와 가입자 수는 각각 2009년 26,696개, 10,078명에서 2017년 24,465개, 9,981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파업의 경우에는 2011년 612건, 2012년 596건으로 비교적 높은 건수를 기록하다가 최근 2019년에는 268건, 2020년 303건, 2021년 297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쟁의 행위를 수반하는 쟁의'를 산업별로 확인해 보면, 2021년은 의료복지 분야가 18건으로 쟁의 행위가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 교육, 학습지원업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행위 참가인원 역시 의료, 복지 분야가 5,7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052명), 도매소매업(5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 2013~2022년 일본 근로손실일수 (출처 : e-Stat)

연도	근로손실일수
2013	7
2014	20
2015	15
2016	3
2017	15
2018	1
2019	11
2020	2
2021	1
2022	2
평균	7.7

이외에도 일본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살펴보았다. 후생노동부의 '령화 3년 노동조합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의 개황' 중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부분을 보면, '사용자 측과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비율이 92.9%를 기록했으며, 노동조합의 인지율은 90.5%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인권 선언문에서는 공공 부문 근로자와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

5) 최은솔, "윤석열 정부 노사분쟁 '근로손실일수' 역대 최저?", 2023.05.17

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의 근로자는 파업 시행 1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단체 교섭권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영국의 근로손실일수 및 파업 형태

The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에 따르면, 영국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이러하다.

〈표 1〉 2013~2022년 영국 근로손실일수 (출처 : ETUI) *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기록이 없다.

연도	근로손실일수
2013	18
2014	31
2015	7
2016	12
2017	11
2018	10
2019	9
2020	-
2021	-
2022	79.15
평균	17.7

위 그래프의 수치를 통해 계산한 결과 10년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17.7일이다. 즉 영국이 실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나라가 아님은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의 대규모 파업 사건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영국은 본래 2011년의 대규모 파업 이후로 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국가였다. 그런데 올해 2월 공공부문에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진행되며 파업의 영향으로 영국 전역의 학교 수만 곳이 대거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지난 1월까지 8개월간 영국의 파업 비용이 17억 파운드(약 2조 5,8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교사 노조의 파업으로 하루 2,000만 파운드(약 303억 8,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영국과 한국의 파업 형태도 조금 다르다. 영국 노사관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단체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덕에 영국의 노동조합은 매우 결속력이 강하고 제도가 견고하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클로우즈숍[7]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힘도 더욱 증대된다.[8]

6) 김서원, “ 교사·공무원 등 50만명 파업 “임금 올려달라”… 2011년 이후 최대”, 중앙일보, 2023.02.01
7) 클로우즈숍 제도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모든 피고용인은 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유니온숍 규정과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해 있는 조합원 중 에서 선발해야 하는’ 규정이 더해진 것이다.
8) 배지윤, “[고용노동부] 영국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15.06.05,

'Fact-er'
(박우석, 안혜지, 신정원, 김연수)

1-5. 독일의 근로손실일수 및 파업 형태

독일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nt)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독일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8.3일이다. 이는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 (9.1일) 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를 참고한 결과 독일은 2015년 근로손실일수가 28.2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한국보다 낮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표 1〉 2013~2022년 독일 근로손실일수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

연도	근로손실일수
2013	4
2014	4
2015	28.2
2016	5.3
2017	3.2
2018	14
2019	3.9
2020	4.8
2021	9.1
2022	6.5
평균	8.3

독일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독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포괄단체협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즉 단체협약이 산업분야의 전체 또는 부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가입된 모든 기업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하이너 드립부쉬 외 1명, 2014) 또한, 독일은 산별노조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교섭에서는 DGB(데게베)라는 노동조합총연맹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나아가, 교섭자율주의에 의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노조와 기업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실제로 독일의 노동조합의 경우 정당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 한국과 다르게 정치적인 색채가 매우 옅다. 다른 말로, 기업과 노조의 협약이 더욱 직접적인 만큼 노사갈등이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

1-6. 미국의 근로손실일수 및 파업 형태

미국의 노동조합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별, 기업별, 직종별 체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935년부터 복수노조에 따른 배타적 교섭대표노조 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노조로는 NE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SEIU (Service Employess International Union)와 AFSCME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등이 있으며 가입률의 경우 2022년에 10.3% (1천400만 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2013~2022년 미국 근로손실일수 (출처 : 미국노동통계국)

연도	근로손실일수
2013	0.29
2014	0.2
2015	0.74
2016	1.54
2017	0.44
2018	2.82
2019	3.24
2020	0.97
2021	1.55
2022	2.19
평균	1.44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노조 파업 횟수(1,000명 이상 참가한 경우만 파업으로 인정) 는 26건으로 10년 평균(18.1)보다 143% 증가했다.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2.194일로 10년 평균값인 1.4일보다 146% 늘어났다. 또한, 총 120.600명의 근로자가 지난해 파업에 참여했으며 그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98%를 차지했다. 생산업의 경우 총 2,200의 생산업 관련 종사자가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는 1,000명가량의 조업 관련 근로자, 1,200명가량의 목재 산업 관련 종사자도 포함됐다. 또한, 같은 기간 Cornell-ILR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는 424건의 파업이 발생했으며 총 224,000명의 근로자가 파업이나 점거에 참여했다. 횟수는 2021년에 비해 52% 증가했고 (279 → 429건), 참여했던 근로자 역시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0,00명 → 224,000 명). 나아가, 숙박 및 요식업 서비스 종사자들의 파업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31건, 91%) 그 중 대다수는 패스트푸드 산업 근로자의 15달러 캠페인 쟁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노조 근로자들 간에도 파업이 진행됐으나 (전체의 32%), 이러한 파업은 조합원들의 노동 중단 사태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2022년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노동 중단 사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발생했다. 약 46%가 하루 또는 하루 미만 동안 지속되었고, 2/3가 5일 이하로 지속되었다.

1-7. 정리

마지막으로 국가별 근로손실일수에 관해 조사하던 중 다른 유럽 국가의 근로손실일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유럽 국가 중 프랑스와 벨기에가 최근 10년간(2010-2019)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프랑스는 128일, 벨기에는 98일이다.[9] 이 수치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근로손실일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만약 기사에서 이렇게 수치가 낮은 영국이 아닌 프랑스나 벨기에의 수치로 우리나라와 비교했다면 우리나라의 근로손실일수는 낮은 편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근로손실일수를 볼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나라마다 파업의 형태도 다르고 근로손실일수 계산식의 특성상 특정 연도에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면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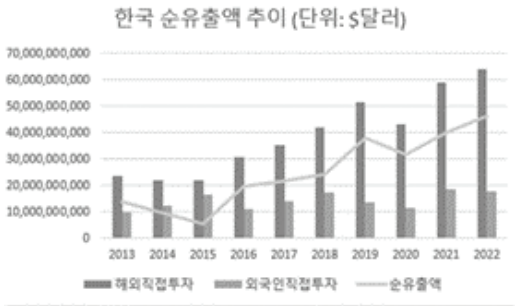
9)Servet Yanatma, “Which countries have the most strikes in Europe and what impact does it have on the economy?”, 2023.03.07

국내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 팩트체크

'Fact-er'
(박우석, 안혜지, 신정원, 김연수)

에 큰 영향을 끼쳐 원래 파업이 많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많은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평균 근로손실일수보다는 국가별로 일수가 특징적인 연도 노사관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더 적절하다. 해외 노사관계 통계를 집계한 한국노동연구원 조규준 책임연구원은 17일 뉴스톱 통화에서 "각 나라마다 노조 조직률, 교섭 상황이 너무 다르므로 그런 것을 배제한 채 근로손실일수를 10년 평균을 내는 건 유의미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 리스크를 피해 기업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조합과 기업 간의 갈등으로 한국의 순유출액(해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뺀 값)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 기업의 활동을 간과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한국 순유출액의 증가 요인을 짚어보며 해당 주장을 검증해 보겠다.

먼저, 지난 10년간 한국의 순유출액 추이는 다음 〈그래프 1〉과 같다. 순유출액은 2013년 138억 200만 달러에서 2022년 463억 5,325만달러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찬가지로, ODI는 약 236억 달러에서 643억 달러로, FDI는 98억 달러에서 17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즉 ODI와 FDI의 규모는 모두 확대되었으나, ODI의 증가 폭이 FDI의 증가폭을 상회했기에 순유출액이 결과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래프 1〉 10년간 한국 순유출액, FDI, ODI 비교

연도	ODI	FDI	순유출액
2000	3,904,905,766	10,285,047,000	-6,380,141,234
2003	5,725,270,373	9,622,809,000	-3,897,538,627
2003	6,158,779,807	9,245,611,000	-3,086,831,193
2001	2,731,862,591	5,035,434,000	-2,303,571,409
2003	4,168,529,386	5,145,200,000	-976,670,614
2002	2,980,273,134	3,807,775,000	-827,501,866
2003	11,127,415,735	9,128,656,000	1,998,759,735
2003	21,965,023,641	16,679,938,000	5,285,085,641
2003	21,956,521,824	12,353,308,000	9,603,213,824
2003	18,718,857,029	6,763,656,000	11,955,201,029
2003	21,257,352,355	8,429,885,000	12,827,467,355
2003	20,724,100,007	7,877,298,000	12,846,802,007
2003	23,693,759,024	9,891,758,000	13,802,001,024
2003	27,206,418,305	10,745,696,000	16,460,722,305
2003	23,081,330,799	5,454,068,000	17,627,262,799
2003	24,460,480,572	6,657,737,000	17,802,743,572
2003	30,583,318,082	10,904,032,000	19,679,286,082
2003	35,523,362,600	13,829,387,000	21,693,975,600
2003	41,911,029,489	17,522,063,000	24,388,966,489
2003	43,286,946,044	11,492,173,000	31,794,773,044
2003	51,456,164,904	13,460,038,000	37,996,126,904
2003	58,995,280,668	18,715,066,000	40,280,214,668
2003	64,331,726,049	17,978,468,000	46,353,258,049

〈표 1〉 국내 순유출액 추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ODI와 FDI 사이의 불균등한 증가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2년에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ODI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465.7% 증가했지만, FDI의 증가율은 501.9%에 그쳤다. G 7 국가의 2000년에서부터 2 021년까지의 ODI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일본(612.5%),캐나다(416.3%), 독일(342.5%),프랑스(322.3%),미국(264.3%),이탈리아(225.6%), 영국(130.4%)이다. 이들과 비교했을 한국의 ODI가 국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순유출액 증가는 한국의 ODI 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ODI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2006년 전에는 순유입 상태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1998년에는 12억 (달러 기준) 을 기록했고, 2002년에는 8억, 2005년에는 38억을 기록했다.

한국의 ODI는 1990년에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5년까지 두 자릿수의 완만한 증가에 그쳤으나, 2006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선

국가별	해외직접투자(ODI, 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 억달러)			
	2000	2021	증가율(%)	순위	2000	2021	증가율(%)	순위
한국	215	5,515	2,465.7	1위	437	2,633	501.9	1위
일본	2,784	19,839	612.5	2위	503	2,570	410.6	4위
캐나다	4,426	22,853	416.3	3위	3,250	14,378	342.4	6위
독일	4,839	21,413	342.5	4위	4,709	11,391	141.9	8위
프랑스	3,659	15,450	322.3	5위	1,842	9,780	430.9	3위
미국	26,940	98,135	264.3	6위	27,832	136,190	389.3	5위
이탈리아	1,700	5,533	225.6	7위	1,225	4,549	271.3	7위
영국	9,402	21,664	130.4	8위	4,395	26,342	499.4	2위

주 : 각년도 ODI와 FDI 금액은 Stock(이는 한 시점에 한 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총 누적금액) 기준으로, 2000년, 2021년의 금액은 그 연도의 금액이 아닌 당해까지의 총 누적금액을 의미

자료 : UNCTAD, 경총 분석

〈표 2〉 우리나라와 G7 국가 ODI,FDI 규모와 증가율 국제비교
출처: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한국경영자총협회, 2022)

단위 : %

	자원개발	수출촉진	저임활용	선진기술 도입	현지시장 진출	제3국 진출
1990~1994	18,9	49,5	14,8	5,4	7,5	0,0
1995~1999	4,3	61,8	13,8	1,8	8,7	0,0
2000~2004	2,1	56,6	15,9	2,9	18,5	0,1
2005~2009	1,6	28,7	19,6	2,9	42,3	2,1
2010~2014	1,8	20,5	10,8	4,1	58,3	3,9
2010	1,7	16,1	11,1	1,8	67,4	1,1
2011	1,7	29,0	14,1	4,2	46,9	3,2
2012	1,4	17,1	10,7	5,2	58,9	6,1
2013	1,6	19,8	7,1	4,1	61,8	5,3
2014	2,8	18,3	10,7	5,2	59,6	3,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표 3〉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동기
출처: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 연구 (신현수 외, 2015)

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7부터는 매년 투자 금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오늘날까지 전반적으로 큰 폭의 투자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증가 폭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보고한 투자동기별 해외직접투자 비중 추이를 통해 설명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동기 요인 중 저임금 활용 비중이 감소하고, 대조적으로 현지 시장 진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기업의 ODI가 저임금을 활용한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서 점차 벗어나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맞춤형 진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0)]

중소기업은 환율, 임금 등 수익성이 해외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박창현 그 외, 2015). 또한, 위 연구에서 분석한 ODI와 노동비용과의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전까지 해외직접투자와 단위노동비용 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자본자유화 확대 이후 양자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노사분규 건수 등 노동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현재 ODI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은행이 2023년에 한국은행이 게시한’최근 해외직접투자 증가 배경 및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해외 대체자산 투자 증가, 미·중 경제분쟁 심화, 기업들의 신기술 확보 경쟁 등 국내외 금융환경과 통상정책의 여러 요인이 ODI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해당 기사에는 순유출액과 함께 중계무역 순수출액을 사용해서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중계무역은 한국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상품을 만들어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무역 형태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난해 중계무역 순수출은 237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해외생산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계무역의 증가는 앞서 설명한 ODI의 확대 원인처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전략이 증가한 결과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보다 증가폭이 작다.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 과도한 시장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과 비호의적인 세제 환경 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정부 규제 정도를 지수화한 한국의 규제환경지수는 67.7점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나아가 최근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로 해외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제우방국의 리쇼어링 전략 등이 전략 등이 FDI의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다. 정리하자면, 순유출액의 증가 원인을 ‘노조리스크’로 규정하여, 한국의 특수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200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ODI에는 기업 및 국가의 투자전략, 경제 안보 등 더욱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또한, 순유출액의 증가를 단순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순유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0) 한국 제조업의 해외생산과 수출의 관계 연구, 2015

국내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 규모 팩트체크

'Fact-er'
(박우석, 안혜지, 신정원, 김연수)

"한국이 파업 다발 국가로 낙인찍혔다."

"한국이 파업 다발국가로 낙인찍혔다"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한국 파업의 인식은 주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경쟁력 지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지수 등 사설 기관들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된다. 하지만 위의 기관들은 주로 기업 경영진이나 경영 책임자들의 설문 조사에 기반하여 결과를 낸다.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 4.0'의 경우 국제기구들의 데이터에 '경영자 의견조사'를 더한 지표들의 총합이다. 즉, WEF의 보고서 노사관계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꼴찌를 기록하는 것은, 한국에서 일하는 자본가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포함한 것으로, 객관적 지표라기보다는 자본가들의 정서적 평가와 심리적 반응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WEF의 경우에는 기업인 설문 조사 비중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과 파업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어떠할까. 201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과제-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자료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청년 대부분은 소속된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위노조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49.9%)하거나 약간 만족스럽다(30.9%)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노총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도 과반이 모든 항목에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노동조합에 참가하는 이유, 노동조합과 간부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공통으로 노동조합을 '나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노동조합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입장들도 살펴보았다. 지난 2022년 10월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파업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인식은 52%를 차지하였으나, 파업의 목적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도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 시설·휴게 시설 등 확충 요구하는 파업은 68%가 적절한 파업이라고 보았지만, 임금 인상 요구하는 파업은 23%만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은 얼마나 필수적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등, 목적이나 업종의 분야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단순히 '파업'이라고 해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 유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이 파업 다발 국가로 낙인찍혔다'라는 주장은 근거의 정확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은 분야,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등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한국이 파업 다발 국가로 낙인찍혔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검증 결과

"대규모 파업이 정례화되면서 (…) 국내 근로손실일수는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다." → 판단 유보

기사에서 언급한 주변 국가의 노조 파업 상황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 독일과 영국의 경우 유럽 국가 중에서도 노사 결속력이 높고 정치적 성향을 보이지 않아 파업이 잦지 않을뿐더러 근로손실일수 역시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상황도 비슷했다. 일본은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비슷하게 크고 작은 규모의 파업이 자주 발생했지만, 근로손실일수는 평균적으로 1~2일을 웃돌았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지형, 관련 규제 제도, 노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른 네 개의 국가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게다가, 근로손실일수 계산식의 특성상 특정 연도에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면 수치에 큰 영향을 끼쳐 본래 파업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많은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평균 근로손실일수보다는 국가별 노사관계에 연도별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리스크를 피해 기업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 거짓

지난 10년간 한국의 순유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사의 주장과 같이 ODI 의 증가 비율이 FDI의 증가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FDI 결정요인과 최근 변화가 갖는 시사점' 과 한국은행이 작성한 "최근 해외직접투자 증가 배경 및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ODI 증가의 핵심 요인은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해외 대체자산 투자 증가, 미-중 경쟁 분쟁 심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투자 결정 요인으로는 지역별 시장 규모, 개방도, 상대 임금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노사 리스크로 인해 순유출액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한다

"한국은 파업 다발 국가로 낙인찍혔다." → 대체로 거짓

201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의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과제..' 자료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10월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참고했을 때 파업의 목적이나 업종별로 노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러므로 한국이 파업 다발 국가로 낙인찍혔다는 기사의 주장은 정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근거 출처

ILO(국제노동기구), 한국은행 '최근 해외직접투자 증거 배경 및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2022) 보고서,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WEF(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경쟁력 지표

그냥 쉬는 청년,
일주일의 함정

'스크류바'
(백유정, 최정윤, 황누리)

제7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검증 대상

"쉬었음 청년 44만 시대"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 및 인식

· 세부 항목 1: 쉬었음 청년 44만 명은 모두 구직 의사가 없는가?

· 세부 항목 2: 쉬었음 청년 44만 명은 모두 막연히 쉬었는가?

· 세부 항목 3: 쉬었음 청년 중 75%는 정말로 구직 의사가 없는가?

선정 이유

'쉬었음 청년 44만 시대, 역대 최대' 등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청년들을 '44만 명의 백수'로 치부하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이들이 정말 일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 산출 방식(일주일 기준)과 보도 방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규명하여 청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선정했다.

검증 방법

데이터 분석, 뉴스 크롤링, 시민 인식 조사, 전문가 자문 및 취재

검증 내용

- MBN, "일할 생각 없다"... 그냥 쉬는 청년 '44만 명' (2024.08.18)
- 한국경제, '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역대 최대 (2024.08.18)
- 중앙일보 '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역대 최대…75%는 "일할 생각 없다" (2024.08.18)
- 매일경제, "원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냥 쉬는' 청년 44만 넘어 역대 최대 (2024.08.19)

I. 들어가며

"지금 뭐 하고 지내니? 요즘 그냥 쉬는 청년이 많다던데…"

"취업은 했니? 요즘 청년들은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네"

휴학생 이은정 씨가 지난 추석에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다. 대학 생활 내내 치열하게 공부하고 다양한 대외 활동에 열정을 쏟은 은정 씨는 노력의 결실로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원하던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인턴을 끝낸 지 두 달째, 은정 씨는 복학 대신 휴학을 선택했다.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새로운 대외 활동을 찾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은정 씨는 '그냥 쉬는 청년'일까?

28세 이서준 씨는 3개월 전 퇴사한 후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두 달 전 면접을 봤지만, 구직 활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최근에는 한 달 동안 여행도 다녀왔다. 그렇다면, 서준 씨는 '그냥 쉬는 청년'일까?

프로필 2
이름: 이은정
나이: 만 22세
성별: 여성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올해 상반기 인턴십을 마친 후
현재 휴학한지 한 달 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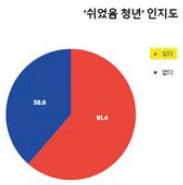
프로필 2
이름: 이서준
나이: 만 28세
성별: 남성

3개월 전 퇴사 후 이직 준비 중
최근 한 달 간 기분전환을 위해 여행을 다녀옴
이직하고픈 마음이 매우 큼

최근 '그냥 쉬는 청년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144개의 관련 기사가 작성되었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쉬었음 청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은 누구를 '쉬었음 청년으로 인식할까?

[참고 1] 쉬었음 청년 시민 인식 조사 주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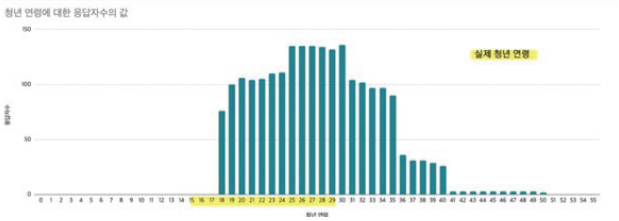
'쉬었음 청년' 에 대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인식 조사 주요 결과이다.



❶ 쉬었음 청년 인지도 조사

→ 쉬었음 청년에 대해 들어본 사람 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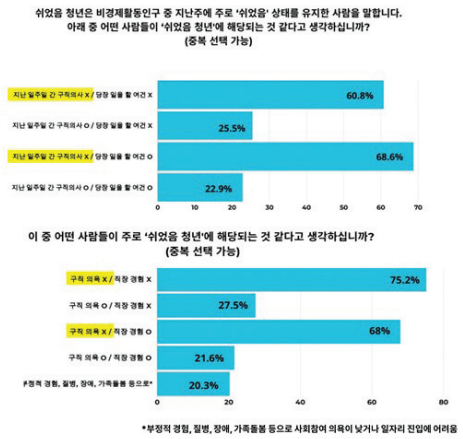
응답자 중 61.4%는 '쉬었음 청년'에 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❷ 청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

→ 주로 18세에서 40세로 인식

'청년'의 기준 나이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연령과 '쉬었음 청년'에서 집계되는 청년의 나이(15세~29세)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153명 중 130명 이상이 25세에서 30세가 청년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약 100명이 20세에서 24세, 31세에서 35세가 청년이라고 답했다. 36세에서 40세를 청년이라 답한 사람은 약 30명이었으며 76명이 18세, 100명이 19세, 그리고 41세에서 50세가 청년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이 청년으로 분류한 15세에서 17세를 청년이라고 본 응답자는 없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통계청의 기준보다 높은 연령을 청년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❸ '쉬었음'의 판단 기준

→ 주로 구직 의사 여부를 기준으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쉬었음 청년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당장 일을 할 여건이나 직장 경험과 같은 조건에 비해 구직 의사 및 의욕을 중요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❹ 구직 의사가 없었던 기간

→ 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라고 인식

'구직 의사가 없는 '쉬었음 청년'은 얼마 동안 구직 의사가 없었을 것 같나요?'라는 질문의 응답 비율은 ▲1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34.2% ▲2위, 6개월에서 1년 이내 26.6 % ▲3위, 1년 이상 19% ▲4위, 한 달에서 3개월 이내 15.2% ▲5위,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 3.8% ▲6위, 하루에서 일주일 이내 1.3%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94.9%가 한 달 이상 구직 의사가 없을 때만 '쉬었음' 청년이라 인식했다.

그냥 쉬는 청년,
일주일의 함정

'스크류바'
(백유정, 최정윤, 황누리)

❺ '쉬었음 청년' 의 이미지

-→ '백수', '무기력' 등 주로 부정적으로 인식

'쉬었음 청년' 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답형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백수' 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무기력', '취업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❻ 인물 조사 결과

→ 이직적극형을 '쉬었음 청년'이라 인식하지 않음

*해당 프로필 실제 쉬었음 여부는 통계청 고용통계과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

조사 문항에서 가상의 인물 6명 (이직적극형, 이직소극형, 취준소극형, 취준적극형, 취약형 포함)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이들을 '쉬었음 청년'으로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해당 분류는 기획재정부 주도 2023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했다. [아래 표 참고]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26.1%가 프로필 1(이직적극형)에 대해 쉬었음 청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프로필 2(취준소극형)에서는 86.3%, 프로필 3(취준적극형)에서는 51.6%, 프로필 4(취약형)에서는 49%, 프로필 5('쉬었음 청년' 아님)에서는 28.1%, 프로필6(이직소극형)에서는 67.3% 가 프로필 인물이 '쉬었음 청년'이라 판단했다. 취준소극형과 이직소극형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에게 구직 의욕이 '쉬었음'을 판단하는 유의미한 기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직적극형의 경우 이들이 '쉬었음 청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응답자는 이들을 '쉬었음 청년'이라 인식하지 않았다.

유형	특성	쉬었음 이행과정 · 전망	시사점
①취준-적극형	직장경험 X 구직의욕 ↑	· **졸업후 충전** 위해 쉬는 상태, **구직의지와 계획**은 있지만 진로에 대해 **일부 불안감**	· 학교-노동시장 원활한 이행 위해 **일경험, 진로탐색** 등 지원 필요
②취준-소극형	직장경험 X 구직의욕 ↓	· 지속적 취업 실패 등으로 **쉬었음 기간이 장기화**되며 **구직의욕 감소**, 도전 어려움	· 일경험·훈련, 진로탐색 + **자존감·사회성 회복** 지원 병행 필요
③이직-적극형	직장경험 O 구직의욕 ↑	· **경력개발** 위해 퇴직, **재취업 계획**은 있지만 시간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	· **이직이 보편화**된 세대적 특성 반영 → 정책수요·개입 필요성이 가장 낮은 유형
④이직-소극형	직장경험 O 구직의욕 ↓	· **소진, 적성 불일치** 등으로 퇴직, 상향이직 기대 불투명으로 **구직계획에 어려움**	· 예방적 진로경험, **직장적응·진로변경** 지원 + **고립·단절 악순환 방지** 지원 필요
⑤취약형	환경적 취약성 ↑	· **부정적 경험 질병장애 가족돌봄** 등으로 **사회참여 의욕**이 낮거나 일자리 진입에 어려움	· **개별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 해소** 필요

[기획재정부 주도 2023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표]

[참고 2] 시민 인식과 실제 개념 팩트체크

❶ 쉬었음 청년은 만 25세~30세다

→ 쉬었음 청년은 만 15세~29세다

통계청에서는 청년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할 때 만 15세~ 29세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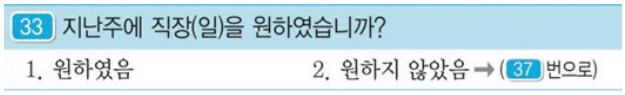
❷ 쉬었음 청년은 '구직 의사'를 기준으로 나눠진다

→ 쉬었음 청년 중에서도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에 주로 '쉬었음' 상태를 유지한 사람을 뜻한다. 이들 중에는 지난주에 직장을 원했거나,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 사람도 포함된다.

❸ 쉬었음 청년 중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3~6개월 동안 구직 의사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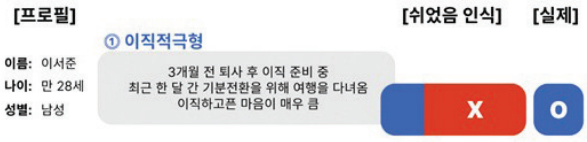
→ 쉬었음 청년 중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지난 일주일 간 구직 의사가 없었다



통계청은 매달 진행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쉬었음 청년의 구직 의사를 판단할 때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질문한다. 후술할 대부분의 기사에서 말하는 '일할 생각 없음 75%'의 기준 역시 지난 일주일이다.

❹ 이직적극형은 쉬었음 청년이 아니다

→ 이직적극형도 쉬었음 청년이다



인식 조사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한 이서준 씨는 기획재정부 주도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기준 이직적극형 (직장 경험 O, 구직 의욕 ↑) 이다. 실태조사 결과 서준 씨와 같은 이직적극형이 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왜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뉴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Ⅱ. 팩트체크

[팩트체크 요약]

· 쉬었음 청년 44만 시대, 역대 최대' 등과 같은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44만 명의 백수'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

· 2024년 7월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이 44만 명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나, 이 중 75%인 33만 명만이 실제로 구직 의사가 없는 상태임

· 또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구직 의사는 지난 일주일 기준으로 판단되나 다수의 기사에서는 '일주일' 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

· 통계청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향후 일 년'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은 약 60~7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함

· 시민들은 쉬었음 청년의 구직 의사 없는 기간을 평균 3~6개월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해 가능성 존재

그냥 쉬는 청년,
일주일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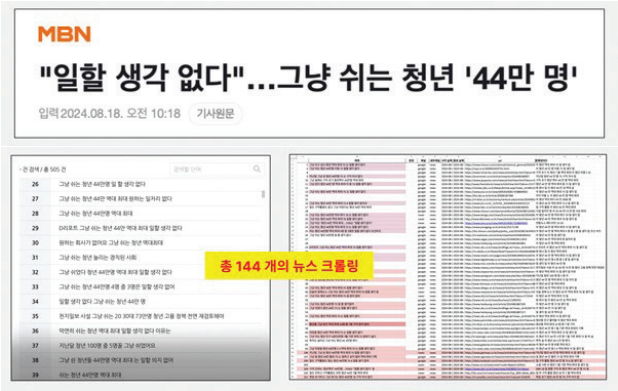
'스크류바'
(백유정, 최정윤, 황누리)

· 따라서 첫 번째로 쉬었음 청년 44만 명은 모두 구직 의사가 없을까? 라는 명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
· 두 번째로 쉬었음 청년 44만 명은 모두 막연히 쉬었을까? 라는 명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
· 또한 쉬었음 청년 중 75%는 정말로 구직 의사가 없을까? 라는 명제는 절반의 사실로 판정

[검증내용]

❶ 쉬었음 청년 44만 명은 모두 구직 의사가 없을까?

→ 사실이 아니다



2024년 8월 19일 MBN 뉴스는 "일할 생각 없다"‥그냥 쉬는 청년 44만 명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의 헤드라인은 그냥 쉬는 청년 44만 명이 구직 의사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쉬었음 청년 44만 명은 정말 모두 구직의사가 없을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양현정 주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쉬었음 청년 44만 명 중 344,847명(약 75.6%)만이 지난 일주일간 구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전체에서 이를 뺀 나머지 11만 명은 일할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다. MBN의 사례와 같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헤드라인의 뉴스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고, 관련 사례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텍스톰Textom을 이용한 크롤링을 진행했다.

크롤링을 통해 전체 기사 144개 중 (24년 7월 01일 ~24년 9월 08일) 약 10%가 이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의 기사는 구직 의사와 관련하여 약 11만 명의 오차를 만들었다. 즉, 청년 44만 명 모두 구직 의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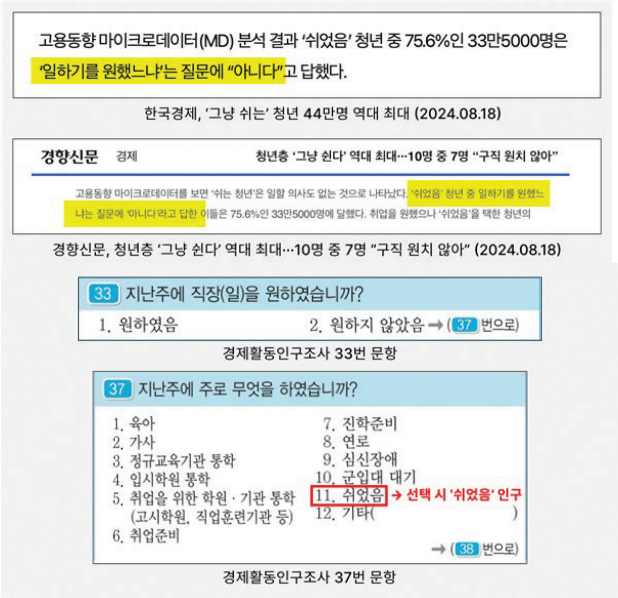
❷ 쉬었음 청년 44만 명은 모두 막연히 쉬었을까?

→ 사실이 아니다

쉬었음 청년의 용어를 설명하는 뉴스에서도 이들이 막연히 쉬었다고 언급하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2024년 8월 18일 자 SBS 뉴스를 포함한 다수의 기사에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해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표]에서 쉬었음 청년을 분류하는 문항을 확인한 결과, 쉬었음 청년은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사람(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에 주로 '쉬었음' 상태를 유지한 사람을 뜻한다. 즉 막연히 쉬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지난 한 주간 쉬었음 상태에 있던 사람이다. 또한 지난주에 구직 의사를 가진 사람 역시 2024년 7월 기준 약 25%를 차지하므로,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또한 쉬었음 청년의 정의와 관련하여 텍스톰을 이용한 크롤링을 진행해 본 결과, 본문에서 쉬었음 청년의 분류 기준을 정확히 설명한 기사는 전체 144개 중 단 5개에 불과했다.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적절하지 않은 제목은 '쉬었음 청년'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쉬었음 청년 44만 명이 모두 막연히 쉬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❸ 쉬었음 청년 중 75%는 정말로 구직 의사가 없을까?

→ 절반의 사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 중 75.6%인 33만5000명은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한국경제, '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역대 최대 (2024.08.18)

경향신문 경제 청년층 '그냥 쉰다' 역대 최대…10명 중 7명 "구직 원치 않아"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쉬는 청년'은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75.6%인 33만5000명에 달했다. 취업을 원했으나 '쉬었음'을 택한 청년의

경향신문, 청년층 '그냥 쉰다' 역대 최대…10명 중 7명 "구직 원치 않아" (2024.08.18)

33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1. 원하였음 2. 원하지 않았음 → (37 번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33번 문항

37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육아
2. 가사
3. 정규교육기관 통학
4. 입시학원 통학
5.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6. 취업준비
7. 진학준비
8. 연로
9. 심신장애
10. 군입대 대기
11. 쉬었음 → 선택 시 '쉬었음' 인구
12. 기타( )

→ (38 번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37번 문항

'일하기를 원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는 75.6%인 33만 5,000명. 쉬었음 청년을 주제로 하는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이 사실이다. 우선 해당 통계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 통계의 조사지와 원자료를 찾아보았다.통계청 양현정 주무관과의 유선 인터뷰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일하기를 원했느냐'라는 질문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33번 문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쉬었음 청년을 구분하는 문항이 37번 문항에 해당한다는 것 역시 확인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2024년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 중 청년 쉬었음 인구에 해당하는 8,258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33번 항목에 응답한 비율과 모수 추정 시의 오차에 대해 계산해 보았다. 통계 계산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강윤철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했다.

$$\hat{p} = \frac{\text{만 15 29세 중 '원하지 않았음'과 '쉬었음' 동시 응답자 수}}{\text{만 15 29세 응답자 수}}$$

$$\hat{p} = \frac{314}{8258} \approx 0.038$$

1. 표본 비율 (p^) 계산

표본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위와 같다. 2024년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체 표본 중 만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를 분모에, 만 15세에서 29세 중 33번 문항에 '원하지 않았음', 37번 문항에 '쉬었음'을 동시에 응답한 사람의 수를 분자에 두고 계산한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공식에 해당하는 표본을 찾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2. 표준 오차 (SE) 계산

$$SE = \sqrt{\frac{\hat{p} \times (1-\hat{p})}{n}} \times \sqrt{\frac{N-n}{N-1}} = \sqrt{\frac{0.038 \times (1-0.038)}{8258}} \times \sqrt{\frac{8356825-8258}{8356825-1}}$$

$$SE \approx 0.00213$$

표준 오차를 구하는 계산식은 위와 같다. 여기서 n은 만 15세에서 29세 응답자 수, 즉 표본의 크기 8,258명이고, N은 만 15세에서 29세 인구수, 즉 모집단의 크기 8,356,825명이다. p^은 위에서 계산한 표본 비율, 즉 0.038이다. 모집단 크기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중 2024년 7월값을 사용했다. 이를 계산한 결과 약 0.00213의 값이 나왔다.

그냥 쉬는 청년,
일주일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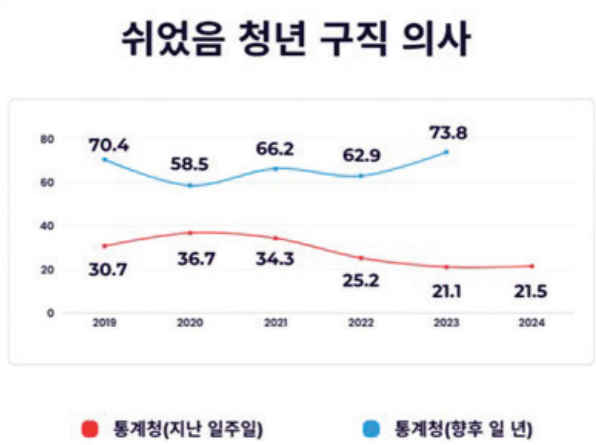
'스크류바'
(백유정, 최정윤, 황누리)

3. 95% 신뢰 구간

95%의 신뢰도를 사용하여 신뢰구간을 계산했다.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모집단 추정치는 약 318,000명 (317,559.35 명)
오차 범위는 약 35,000명 (34,888.073 명)
신뢰 구간은 약 283,000~352,000명
(282,671.277~352,447.423명)

즉, 쉬었음 청년 중 구직 의사가 없었던 청년은 신뢰도 95%에서 약 28만 명~35만 명 사이의 값이 나온다. 보도된 144개의 뉴스 중 44만 명만을 언급한 10%와는 약 16만 명의 오차가, 나머지 90%와는 약 5만 2,000명의 적지 않은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쉬었음 청년의 구직 의사 비율에 대해 정반대의 결괏값을 가진 정부 자료를 발견했다. 작년 11월 15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주도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의 구직 의욕 통곗값은 통계청의 값과 현저하게 다르다. 통계청과 각종 보도가 쉬었음 청년 44만 명 중 약 75%인 33만 5천 명이 구직 의사가 없다고 분석한 데 반해, 정부 보고서에서는 2023년 7~10월 쉬었음 청년 주요 실태조사 결과* '쉬었음 청년의 절반 이상('22년, 65.1%)이 1년 이내 구직 의사가 있으며, 이 중 66.4%는 구체적 구직 계획도 보유'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즉, 통계청은 구직 의사조차 없는 쉬었음 청년이 전체의 75%에 달한다고 분석했지만 정부 보고서에서는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은 전체의 약 35%에 불과하며 65%의 청년이 구직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출처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두 통계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두 분석 사이에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지난주'의 구직 의사를 통계에 반영한 데 반해, 정부는 향후 1년간의 구직 의사를 반영했다. 이처럼 통계청이 구직 의사의 유무를 지난주로 제시하고 조사할 때와 향후 1년으로 할 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1년 동안의 구직 의사를 조사했을 때는 쉬었음 청년의 약 70% 정도가 구직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직의사표, 매년 8월 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기사에서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제시하지 않아 마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75%가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설문 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구직 의사 확인 기간을 일주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쉬었음 청년'이 구직 의사가 없을 때, 그 기간을 추측하는 문항에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라 답한 응답자들이 3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다른 응답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26.6%로 두 번째, 1년 이상이 19%로 세 번째, 한 달에서 3개월 이내로 15.2%로 네 번째,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가 3.8%로 다섯 번째, 그리고 하루에서 일주일 이내가 가장 적은 비율인 1.3%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과 기사의 보도 간 간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사가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사람들의 오해를 더한 데 있다. 특히 구직 의사와 관련하여 '지난주'에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것이라고 언급한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보도가 완전히 틀린 사실을 전한 것은 아니나, 보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그냥 쉬는 청년' 중 75%는 지난주에 구직 의사가 없었음을 명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쉬었음 청년 중 75%가 구직

의사가 없다는 보도는 판단의 주요한 요소인 '일주일'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절반의 사실'로 볼 수 있다.

III. 결론

'I. 들어가며'에서 보았던 두 청년(이은정 씨, 이서준 씨)은 모두 쉬었음 청년이다. 두 청년은 평소 구직 의사가 있고, 쉰 기간이 한 달이 채 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쉬었기 때문에 쉬었음 청년으로 보도되었다. 두 청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구직 의사 없이 쉰 청년은 평소에 구직 의사가 있더라도 이는 무시된 채 쉬었음 청년으로 보도된다. 구직적극형, 이직적극형이 '쉬었음 청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뉴스는 이를 명시했야 했다. 온전한 사실을 담지 않고 '44만', '일할 생각 없다'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결국 청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검증 결과

· **사실이 아님** (구직 의사 전무 및 막연히 쉼에 대한 항목)

· **절반의 사실** (75% 구직 의사 없음 항목 - '지난 일주일'이라는 기간 한정이 생략된 보도 방식 때문)

근거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지 및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기획재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보고서(2023)', MDIS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뉴스 크롤링 결과

“왕서방은 지금 아파트 쇼핑 중? 팩트체크

‘초가집삼남매’
(문정윤, 윤도진, 정채원)

제8회 팩트체킹 공모전 팩트체크 부문 대상 수상작

검증 대상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주장 및 관련 인식

· 세부 항목 1: 중국인 집주인(소유주)이 실제로 급격히 늘고 있는가?

· 세부 항목 2: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국내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인가?

· 세부 항목 3: 상호주의 미시행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가?

선정 이유

2025년 부동산 대책 이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매 이슈가 다시 화두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인의 매수 비율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온라인상에서 댓글이 사실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있어, ‘중국인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자극적인 정보들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했다.

검증 방법

공식 통계 분석, 학술 연구 검토, 해외 사례 비교, 정부 기관 발표 확인

검증 내용

I. 팩트체크 배경

2025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시행된 부동산 대책 이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매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금융권에서 규제하는 제한된 대출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의 영향이다. 화두의 핵심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외국인(중국, 미국 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논지에서 출발한다. 또, 대출 규제 정책의 여파가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이슈로 번지는 까닭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전제된다. 외국인 역시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면 당연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은 국내의 규제 정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의 부동산 매매를 원하는 외국인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는 국내보다 관용적인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국외 금융권의 경로를 통해 대출받은 후, 해당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너무나도 손쉽게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 비율 증가와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회자된다. ‘120억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자는 33세 중국인(조선일보)’, ‘한국서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 보니(YTN)’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의 잇따른 보도가 남긴 담론이다. 나아가 국내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타국가들에 비해 유독 취약하다는 점과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성상 실질적인 상호주의의 성립이 어렵기에 중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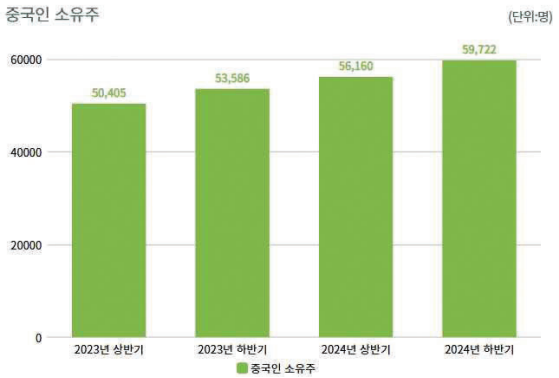
한편,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는 국내의 최근 경향을 ‘외국인 부동산 매매’ 키워드 관련 콘텐츠에 달린 댓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댓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그리고 댓글이 사실처럼 취급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댓글에 대한 진위 판단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바, 본고에서는 댓글을 통한 ‘외국인 부동산 매매’ 이슈 탐색,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 이슈를 중심으로 본 주제에 대한 팩트체킹을 진행했다.

II. 팩트체크

아래는 언론사 포털 사이트(기사, 뉴스 등)에 ‘외국인 부동산 매매’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노출되는 콘텐츠에 달린 댓글 중 일부다. 댓글에 달린 공감 수나 노출되는 댓글 내용의 빈도, 댓글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기준으로 댓글을 선정하였으며, 댓글에 담긴 의미나 관점을 파악함에 용이하도록 문장을 가능한 온전히 인용했다.

1.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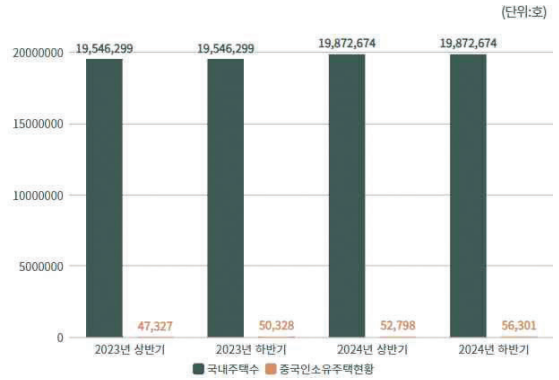
위 댓글들은 국내 부동산 소유주 중 중국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여러 언론에서 외국인 집주인, 특히 중국인 집주인이 늘어난다는 기사들을 내보내며 그에 따른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에 나라가 팔려간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한다. 그런데 과연 위 댓글들의 내용은 사실일까? 중국인 소유주의 비율이 정말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



(1) 중국인 소유주는 증가하는가?

국내 중국인 주택 소유 통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상·하반기와 2024년 상·하반기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의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 소유자 수를 직접 합산해 중국인 소유주 수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국인 주택 소유주는 50,405명 → 53,586명 → 56,160명 → 59,722명으로 전년반기 대비 각각 6.3%, 4.8%, 6.3%씩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 소유주가 점점 늘어난다는 [댓글 1]의 주장이 '사실'임을 의미한다.

댓글 1
"중국인 집주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 사실



(2) 중국 자본의 개입 정도가 '중국에 팔려가기 일보 직전'일 만큼 심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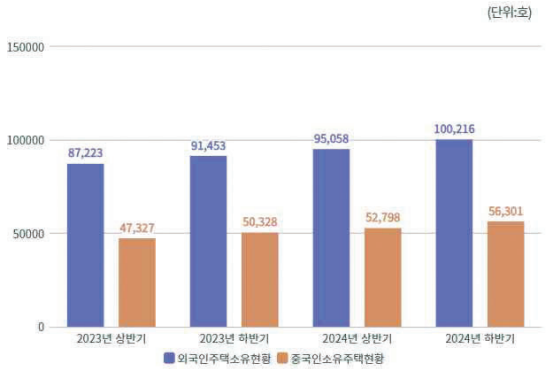
중국인 소유주가 2년간 5만 명대를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국내 전체 주택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해야, '중국인 소유주 5만 명대'라는 통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수치인지 판단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시한 국내 주택 수와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중국인 소유주택 수를 직접 비교해 구한 외국인 소유 주택 수 중 중국인 소유 주택의 비율은 2023년 상·하반기 0.24%, 0.25%, 2024년 상·하반기 0.26%, 0.28%이었다. (국내 주택의 수는 연 단위로만 제공되어, 반기별 수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전체 외국인 주택 소유 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4.2% → 55% → 55.5% → 5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결국 중국인 소유 주택의 모집단을 외국인소유 주택으로 한정하여 고려하는 경우, 중국인의 비중은 과반(약 55.3%)을 차지하기에 기사 내용의

“왕서방은 지금 아파트 쇼핑 중? 팩트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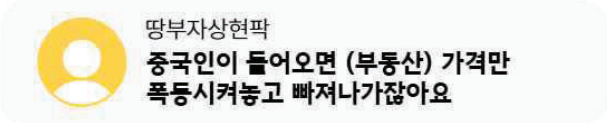
‘초가집삼남매’
(문정윤, 윤도진, 정채원)



일부만을 접한 사람들은 마치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잠식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국내 전체 주택 시장에서 중국인 소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0.26%에 불과하기에, 해당 수치를 두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팔려가기 일보 직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주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토지 소유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상·하반기와 2024년 상·하반기에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20,818천㎡ → 20,804천㎡ → 20,993천㎡ → 21,218천㎡로, 평균 약 21,000천㎡이었다. 이는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0.27% 이기에, 중국인의 보유 토지면적은 전체 국토의 (0.27% x 7.9%=) 약 0.021%에 불과하다. 또한, 2025년 1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 부평(195건)이었으며, 그 뒤를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이 따랐다. 이 지역들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중국인의 개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0.021%이고, 이 또한 실거주 목적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근거해 [댓글 2]의 주장은 ‘과장된 정보’이다.

댓글 2
“우리나라는 중국에 팔려가기 일보 직전” → 과장된 정보

2.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로 인해 한국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주장이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언론 기사에서 자극적으로 제기되는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외국인 매입 규모가 크다는 가정, 둘째, 그 매입이 한국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있는지, 외국인 소유 규모와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해외의 유사 사례에서는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 사례처럼 외국인 매입이 집중된 지역의 경험은 본 논의에서 중요한 비교 자료가 된다.

쟁점 1에서 살펴보았듯, 국내 외국인 소유주택은 약 10만호 수준으로, 전체 주택 재고 대비 약 0.2%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거래 건수의 60% 이상,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8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만 보더라도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에 편중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 행위가 한국 전체 주택 시장을 직접적으로 좌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정 지역, 특히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외국인 거래가 일정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25년 8월 국세청은 외국인 탈세자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의 사례 49건을 적발했음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 강남권 고가 아파트 취득자였으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 해외 계좌와 불법 환치기,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 불투명한 경로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반 매수자 대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전체 외국인 거래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구조적으로 한국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 집중의 대표 사례다.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매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광객 유치 환경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0년 이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연구』에서는 투자 이민 제도가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는 제도적 유인으로 작용했다. 두 연구 모두 제주 주택·토지 매입 수요가 중국인을 중심으로 증가한 시기가 있었고, 그 증가가 제주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및 토지 가격 급등과 시계열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음을 언급한다. 이들 논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시행은 중국인의 제주도 내 부동산 매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제주도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 매수가 주택 및 토지 가격에 지역적으로 유의미한 상승 압력을 가한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다만, 구체적 '연도별 매수 건수 대비 가격 상승률'을 제도적 으로 통제한 인과관계 실증 모형보다는 상관관계·사례분석 중심이며, 투자이민제도의 조건 변화 후 매입 증가가 감소한 점 등 정책 변화가 가격 흐름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언급도 있으므로, '외국인 매수만으로 폭등'이라는 결론은 과장된 해석이라 판단된다.

댓글 3
"중국인이 들어오면 국내 부동산 가격은 폭등한다" → 과장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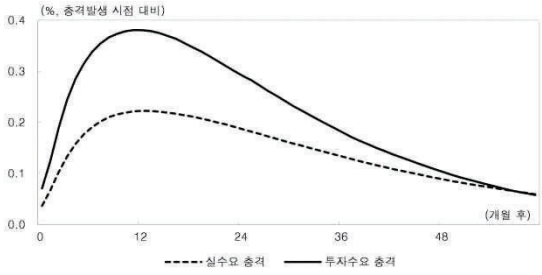
3. 집값 상승의 주범은 내부에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국인 매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0년대 중반, 런던에서는 중국·중동 자본의 대거 유입이 런던 프라임 마켓을 자극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비슷한 시기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호주 시드니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결국 2018년 뉴질랜드에서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아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집값 상승을 촉진했다는 인식은 국제적으로 널리 퍼져있지만, 정작 실제 통계는 그러한 여론과 상반된 시각이 주를 이룬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진은 2016년 8월 외국인 취득세(Foreign Buyer Tax) 도입 이후,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인근 지역보다 약 6%가량 더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주택 통계 프로그램(Statistics Canada) 및 REIC 보고서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인) 소유 주택은 전국 주택 재고의 2~6% 수준에 불과하며, 밴쿠버는 약 4.2%, 토론토는 약 3% 수준이다. 이러한 비중으로는 외국인 매입만으로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기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호주의 사례 역시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호주의 경우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패널 공적분석(panel cointegration)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주택 가격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신축 주택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을 때 가격이 소폭(1.95%)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시드니의 'China-suburbs'로 분류된 지역에서도 중국계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약 3% 하락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나아가 ANZ 리서치와 CoreLogic 등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의 집값 급등은 외국인 매입보다는 공급 부족, 저금리, 국내 수요 확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건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특정 지역, 특정 주택 형태(신축 아파트, 고급 주택)에서는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전체 주택 시장의 가격을 주도할 결정적인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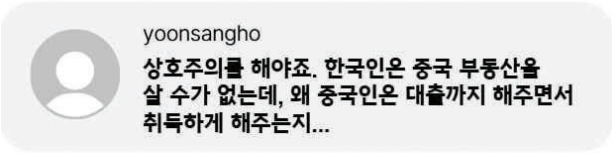
한편, 한국 주택 시장은 내국인 중심의 높은 자가·투자 수요, 공급 부족, 저금리 기조, 그리고 정책적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크다. 외국인 매입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승세는 내국인 투자 심리와 정책 환경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거래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투자 수요 식별 및 아파트 가격의 변동 요인 분석』은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대 목적 거래량을 별도로 구축하고, 부호제약 구조 VAR 모형을 사용해 투자 수요·실수요·공급 충격이 시기에 따라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한다. 연구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가격 급등 구간에서 투자 수요 충격이 가격 변동의 약 37.4%, 실수요 충격이 약 47.5%, 공급 충격이 약 15.1%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한다.

추가로, 『아파트가격변화율에 대한 요인분석 : 동학 요인 분석 모형 활용』에서 전국 21개 지역의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아파트가격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 요인과 개별 지역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서울권역은 권역 요인의 영향이 컸다. 이는 전국 단위의 시장 변동성에서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함을 보여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승훈 연구원은 “한국 아파트 시장은 투자자산의 기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투자 수요 변화가 가격 급등기를 설명하는 데에서 실수요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술연구들은 외국인 매입이 아닌 내국인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 그리고 공급 조건 및 금융 환경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 주택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외국인 매입은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 중 하나이나, 전체적이고 지속적인 가격 폭등을 설명할 만큼의 비중은 갖지 못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상호주의를 시행하라?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 이슈에 대해 논의하면, 말미에는 상호주의(相互主義)의 도입을 촉구하는 주장이 늘 제기된다. 국제관계, 무역,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 유사한 대우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외교의 기본 전제라는 논지다. 하지만 한국인의 중국 부동산 매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인 것처럼 묘사하는 위댓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물론 중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베이징 주택도시개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기간 동안 중국에서 공부하거나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 또,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애당초 정부 소유이기에 상호주의에 의한 ‘매매’보다는 ‘리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은 중국인에게 유리하게 설정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 국가들은 어떤 형태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규제하고 있을까?

국제법상 국가 주권에는 정당한 공공이익을 위해 자국 토지 소유권에 대한 국내적 규제(외국인 토지 제한 포함)를 시행할 권한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국내와 달리 국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주택 등) 매매 규제가 꾸준히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부동산 분야에서의 강력한 규제로 유명한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현지 부동산 매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가파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치로, 당초 2025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2027년까지 연장됐다. 비슷한 맥락에서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공공주택(HBD) 아파트 매입을 금지했다. HBD란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 주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싱가 포르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있다.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국민이거나 현지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이 민간 주택을 매입하면 기본 세금 외에 60%의 추가 인지세(ABSD)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외국인이 빈 택지, 테라스 하우스, 단독 주택, 반 단독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법’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의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호주 역시 자국만의 정책을 통해 외국인의 아파트 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투자 심의 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신축 주택은 매입할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은 살 수 없도록 하거나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을 연간 6개월 이상 비워 두면 공실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을 활용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를 규제하고 있다. 한편 상호주의 시행에 의한 외국인 거래 제한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징수(부동산 취득세)는 종종 시장 안정을 이끌 정책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호주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상호주의 시행 이후 2022~2023년 회계연도 동안 외국인은 호주

전역에서 약 5,360건의 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기존 주택은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거래량으로 환산하면 극히 제한적인 수치다. 또, 이를 두고 호주 정부에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존 주택 외국인 매입 2년 금지 조치가 시장 전체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토록 고대했던 상호주의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뉴질랜드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8년 상호주의 시행에 의해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에 대해 뉴질랜드 부동산협회(REINZ)는 외국인 매입 비중이 전체 거래의 3.8%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주의 시행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로, 집값을 움직이는 건 외국인의 매입보다는 공급 부족과 금리 등 국내 요인에 따라 움직였다는 분석의 근거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례들로 미루어 우리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소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눈에 띄는 지역적 효과를 이끌 수는 있겠으나,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정도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 4

"상호주의 미시행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 과장된 정보

III. 판단 결과

본고는 위와 같은 팩트체킹 과정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중국인 소유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명제에 대해서다. 한국부동산원 등의 2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해당 명제는 사실로 밝혀졌다. 다만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다'라는 식의 표현은 중국인 소유주의 수로 미루어 과장됐을뿐더러, 부정확한 표현으로 갈등만을 유발하기에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중국 자본의 개입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의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다. 해당 명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행정당국 차원의 연구와 해외 연구 및 실제 사례를 근거로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나아가 상호주의를 시행함으로써 폭등하는 국내의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 해당 부분은 국내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외부의 자본보다는 내국 차원의 공급과 투자, 금융 환경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미루어, '상호주의 시행 여부는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참인 명제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4개의 댓글 판단 결과, 4개의 댓글 중 사실인 댓글은 1개, 과장된 정보 댓글은 3개였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거짓이나, 사실에 기반한 정보보다, "과장된 정보를 사실로 오인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 결과

· **대체로 사실이 아님** (중국인 소유주 수 증가는 '사실'이나,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0.26%)과 토지 면적(0.021%)은 매우 미미하여 시장을 지배하거나 가격을 폭등시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됨)

근거 출처

한국부동산원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2023~2024),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국세청 및 법원 등기정보광장, 주요 학술 논문 및 연구, 해외 통계 자료

통계자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리하는 기사 팩트체크

'편파타파'
(오서은, 신수연, 김성주, 김태호)

제2회 팩트체킹 공모전 서울시교육감상 수상작

검증 대상

여성신문의 "성범죄 중 무고 40%라고? 실제로는 0.78%… 가해자 역고소 남발이 문제"라는 기사 내용

· 세부 항목 1: 성범죄 대비 무고 기소 비율 0.78%가 적절한 통계인가?

· 세부 항목 2: 무고 고소가 실제로 '남발'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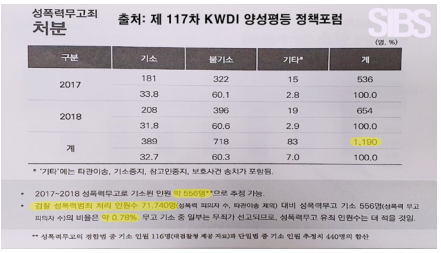
선정 이유

여성신문이 보도한 통계(0.78%)와 대중이 인식하는 무고죄 비중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올바른 통계 자료라 하더라도 매체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의도적으로 정리하여 기사를 내보내는 행태가 '가짜 뉴스'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비판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팩트체크 했다.

검증 방법

통계 데이터 재분석, 비율 산출 방식 검토, 발생 빈도 계산

검증 내용



성폭력무고죄 처분 출처: 제 117차 KWDI 양성평등 정책포럼

(명, %)

구분	기소	불기소	기타*	계
2017	181	322	15	536
	33.8	60.1	2.8	100.0
2018	208	396	19	654
	31.8	60.6	2.9	100.0
계	389	718	83	1,190
	32.7	60.3	7.0	100.0

* '기타'에는 타관이송,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 송치가 포함됨.

- 2017~2018 성폭력무고로 기소된 인원 약 556명**으로 추정 가능.
- 검찰 성폭력범죄 처리 인원수 71,740명(성폭력 피의자 수, 타관이송 제외) 대비 성폭력무고 기소 556명(성폭력 무고 피의자 수)의 비율은 약 0.78% 무고 기소 중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므로, 성폭력무고 유죄 인원수는 더 적을 것임.

** 성폭력무고의 경합범 중 기소 인원 116명(대검찰청 제공 자료)과 단일범 중 기소 인원 추정치 440명의 합산

앵커 지난 2019년 7월 23일, 여성신문의 한 헤드라인입니다. **"성범죄 중 무고 40%라고? 실제로는 0.78%… '가해자 역고소 남발이 문제'"** 이 기사에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폭력 무고죄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부추기고, 피해자가 수사 대상이 되게 하여 가해자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SIBS 뉴스에서는 성범죄 무고 비율 40%와 0.78%라는 이 극단적인 차이에 대해 오늘의 팩트체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취재하는 오서원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네, 오서원입니다 첫 번째 체크입니다. **"정말 무고비율 0.78%인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위원회 부위원이 발표한 검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7만 1,740건 대비 무고기소 556건 비율은 0.78%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 관련 범죄 무고죄로 신고된 사건은 총 1,190건이었는데요 이 중 556명이 기소되었으므로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럼 이 기사만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는 무고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죠. 자료 자체는 팩트가 맞지만 여성신문에서 의도하는 바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입맛에 맞게 정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럼 두 번째 팩트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고 고소가 정말 남발되고 있는가?"** 무고 고소권이 1,190건이면 많다고 그러시지 않나요?

기자 1,190건이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이 통계는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의 통계이기 때문에 하루에 1.6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7만 1,740건과 비교해보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네요. 단순히 수치만 봤을 때는 무고고소가 많아 보이지만 남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여성신문의 성범죄 중 무고 40%라고 실제로는 0.78%, 가해자 역고소 남발이 문제라는 기사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0.78%라는 수치 자체는 팩트였지만 통계자료를 자신들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정리한 것이었고 실제로 무고고소 중 기소되는 경우는 46%였습니다.

앵커 이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목에 강범위한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유발한 점. 둘째, 통계자료를 자신들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 셋째, 여성 위주의 편향적인 방향으로 기사를 집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흔히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올바른 통계 자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정리하여 기사를 내보내는 건 역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SIBS 뉴스 김성주였습니다

검증 결과

· **절반의 사실** (0.78%라는 수치 자체는 계산상 팩트이지만, 통계의 분모를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무고죄의 실태를 축소 왜곡했기 때문임)

근거 출처

검찰 통계자료, 무고죄 기소율 데이터, 일일 평균 데이터

종이 빨대는 정말로 친환경적일까?

'PSPS'
(신민정, 홍다연, 박준한, 박래한)

제4회 팩트체킹 공모전 청소년부 대상 수상작

검증 대상

플라스틱 빨대 대신 사용하는 종이 빨대는 정말로 친환경적일까?

선정 이유

최근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사용이 늘고 있으나, 소비자가 '착한 소비'라고 믿고 사용하는 종이 빨대가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 주제로 선정했다.

검증 방법

성분 조사, 폐기 과정 분석, 생산 에너지 조사, 생애주기 평가(LCA)

검증 내용

I. 친환경의 정의

친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오염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 또는 그런 행위나 철학을 가리킨다. 친환경적인 국제적 프로젝트의 의미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립하지 않고 태워버리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 어울리는 것 또한 100% 신뢰할 수 없는 일이다.

II.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성분

1. 종이빨대의 성분

종이 빨대는 말그대로 종이로 만든 빨대를 말한다. 하지만 종이로만 빨대를 만든다면 일반적인 빨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이 빨대에는 대부분 PLA코팅을 하게 되어있다. PLA(Polylactic Acid)는 옥수수, 사탕수수로 만들어지며 생분해성 수지로 분류된다. 가수분해되면서 젖산이 되기 때문에 주변(수질, 해양)의 PH가 낮아질 수 있고, 습도에 취약하여 고온다습한 곳에 보관하면 PLA재질의 품질 저하가 일어난다. PLA는 소각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PP에 비해 2배 이상 적으며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배출이 없다. 발생하는 탄소도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의 농도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PLA는 사용 후 매립하면 단기간에 100% 생분해되어 흙으로 되돌아가는 특징을 가진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분해는 잘 되지만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되면 오히려 기존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했고,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6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대체재로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이오 플라스틱 중 사용 비율이 높은 생분해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고, 실제 생분해 조건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단계부터 감량하고, 생산-사용-처리 과정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 플라스틱 빨대의 성분

플라스틱 빨대의 주성분은 PP(폴리프로필렌)등 플라스틱 합성수지이다. PP는 열에 강한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내열성이 좋고 값도 싼 편이라 폭넓게 사용된다. PP(폴리프로필렌) 빨대는 기다랗고 좁은 모양 때문에 빨대 내에 묻어있는 음식물을 세척하여 분리배출하기 쉽지 않다. PP(폴리프로필렌)는 소각 시에 1톤 당 3.05톤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약 7억톤으로 이는 대한민국 국토의 약 5.5배 땅에 소나무를 빼곡히 심어야 흡수할 수 있다.

→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이다(성분) - 사실

III. 종이 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폐기 과정

종이 빨대는 2-5개월이면 분해가 되는 반면 플라스틱은 500년 이상이 걸린다. 하지만 종이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와는 다르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대부분의 종이 빨대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이렇게 되면 소각장에서 태워지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된다는 장점은 무색해진다. 탄소배출량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빨대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SU(Humboldt State University)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 하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6g, 종이 빨대는 1.38g으로 단지 0.06g 차이난다. 종이 빨대는 내구성이 약해 음료 하나를 마실 때, 여러 개를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오히려 탄소배출은 늘어 난다. 생애주기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는 쓰레기가 생산되고 폐기되기까지 들어가는 에너지와 유해물질 등을 평가한 지표이다. 위 지표에 따르면 재활용되지 않은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재활용이 되지 않아 환경성이 더 나쁘다고 확인할 수 있다. 플라스틱 음주 빨대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공공 정책과 기업의 운영을 반영한 반면 플라스틱 기반 제품을 대체할 대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나리오 간의 절충조건을 측정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른 곳에서 수명 주기 또는 다른 보호 영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이 논문은 다양한 음주 빨대의 잠재적 환경적 영향을 정량화하고 손익분기 상황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비교 수명주기 평가(LCA)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6개의 다른 마시는 빨대(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종이, 대나무 및 황마)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ILCD에서 권장하는 특성화 모델에 따라 하이브리드 수명 주기 영향 평가(LCIA) 방법이 적용되었다. 감도 분석에는 재사용 률, 세척 조건, 보조 키트 사용, EoL(종료) 전략 및 라이프 사이클 인벤토리(LCI)의 해양쓰레기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의 포함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기본 시나리오에서 플라스틱 마시는 빨대는 재사용 가능한 빨대에 비해 환경 성능이 향상되며 종이 마시는 빨대와 비교하면 11개 카테고리 중 10개 부문에서 유리한 성능을 발휘한다. 사용 단계동안 물과 세제 소비및 추가 요소(가방, 브러시)의 제조가 잠재적으로 더 높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력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의 인터뷰 내용 중 일회용 종이 빨대는 환경적인가'에 대한 질문 중에서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라는 말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잘 썩는다는 우월성에 의해서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빨대는 대부분 소각장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빨대가 잘 썩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라면 플라스틱보다 재활용이 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이 빨대만 모아서 재활용업체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쓰레기의 종이 빨대는 부피가 작아서 선별하는 일이 없다.

→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이다(폐기과정) - 사실 아님

IV. 빨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환경적 에너지

'플라스틱 대신 종이'와 같은 움직임에는 자연(나무)에서 비롯한 종이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종이 1t을 만드는데 나무 24그루, 에너지 9671 kWh, 물 8 만6503아 사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C02) 2541kg, 폐기물 872kg을 발생시킨다. 제조과정에서 목재와 에너지 사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좋다고 할 수 없다.

미국 환경 보호국(EPA)의 폐기물 저감 모델에 따르면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 때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이 907.18kg 당 1.55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같은 무게의 일반 혼합지의 경우 이보다 약 5.5배 많은 8.45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V. 결론 및 대안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성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폐기 과정을 비교해 보면 플라스틱 빨대는 분리수거가 가능한 반면 종이 빨대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그러므로 종이 빨대의 장점인 빨대가 빨리 썩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은 될 수 없다. 또한 종이 빨대를 제작할 때 많은 양의 나무와 에너지, 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을 토대로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종이 빨대는 정말로 친환경적일까?

'PSPS'
(신민정, 홍다연, 박준한, 박래한)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 빨대를 사용한 취지는 좋았으나 대체품에 대한 단점을 분명히 알고 개선해 가야 한다. 종이 빨대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조건을 갖춰야 잘 분해되는 소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온과 고습 조건을 갖춘 인프라 시설과 올바른 분리수거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검증방법 및 검증과정의 단계별 기술

- 종이빨대에 대한 연구결과를 확인
- 플라스틱, 종이빨대간의 폐기 과정이나 폐기시에 유출되는 성분들을 조사해봄
- 플라스틱, 종이빨대를 제작할 때의 환경적 에너지 소비를 조사해봄
- 종이빨대의 성분을 조사해 봄 (확실치 않을 경우, 플라스틱 빨대 또한 조사해 봄)

판정 결과와 이유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성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폐기 과정을 비교해 보면 플라스틱 빨대는 분리수거가 가능한 반면 종이 빨대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된다. 그러므로 종이 빨대의 장점인 빨대가 빨리 썩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은 될 수 없다. 또한 종이 빨대를 제작할 때 많은 양의 나무와 에너지, 물이 소비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을 토대로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환경 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 빨대를 사용한 취지는 좋았으나 대체품에 대한 단점을 분명히 알고 개선해 가야 한다. 종이 빨대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특정 조건을 갖춰야 잘 분해되는 소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온과 고습 조건을 갖춘 인프라 시설과 올바른 분리수거 또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검증 결과

· **사실이 아님** (성분 자체는 친환경적일 수 있으나, 폐기 및 생산 과정 전체를 고려했을 때 친환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거 출처

환경종이네트워크(EPN), 미국 환경 보호국(EPA),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HSU(Humboldt State Universtiy), LCA(생애주기 평가) 결과

투표소의 경계를 잇다

'투표소의경계를잇다'
(김채연, 고예원)

제5회 팩트체킹 공모전 청소년부 최우수상 수상작

검증 대상

강서 지역 커뮤니티(네이버 밴드)에서 논란이 된 '유치원 투표소의 접근성' 문제

· 세부 항목 1: 투표소로 이용되던 유치원이 리모델링을 통해 경사로를 없애고 계단만 만들었는가?

· 세부 항목 2: 경사로가 있어도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구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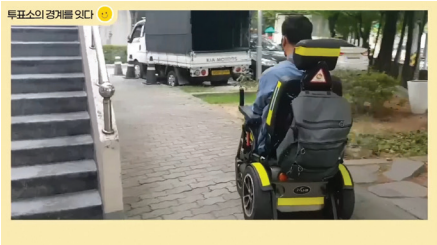
선정 이유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계단 사진)으로 인해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강서구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 여론과 "경사로가 있는데 왜 계단 사진만 올려 혼란을 주느냐"는 반박이 부딪히며 논란이 증폭되었다. 단순히 미디어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장애인 인권 문제를 직접 확인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르기 위해 선정되었다.

검증 방법

현장 방문 및 직접 확인, 비교 체험 및 인터뷰, 법령 및 기사 검토

검증 내용



안녕하세요. 투표소의 경계를 잇다 영상을 준비한 등촌고 2학년에 재학중인 스마일입니다. 저는 최근 영상 제작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배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때 사진 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계단이 예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요. 선생님의 설명은 유치원 계단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단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곳이 계속 투표소로 이용됐던 곳인데 갑자기 계단이 생기면서 투표소로 이용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한 장애인분의 글이었습니다. 그 게시글에 달린 댓글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경사로를 없애고 계단을 만든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강서구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방송에 제보해야 한다" 등 비난의 글이 초기에 달렸는데 새로운 게시글로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계단 옆에 경사로가 있는데 왜 계단 사진만 올려서 혼란을 주냐"는 글이었고 또 다시 "경사로가 있어도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든 곳"이라며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장소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진은 4월 선거 때여서 계단이 참 커 보였는데 9월에 본 모습은 이렇게 나무가 울창해서 좁긴 해도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경사로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 좁게 느껴졌고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바닥 벽돌도 여러 개 튀어나와 있어서 걷기에 불편했습니다. 제가 직접 팩트 체크를 했지만 저는 비장애인으로 장애인분이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께서 저보다 먼저 팩트 체크 한 장애인 분을 알고 계시다고 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 장군 정용근이 간다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 정형근 선생님으로 저는 선생님과 경사로를 걸어가 보면서 각자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함께 팩트 체크를 하다 보니 유치원 후문 쪽에 계단 없이 연결이 가능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는 정용근 선생님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체크를 해본 결과 이곳은 계단 옆에 분명 경사로가 있지만 경사로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니 이 점을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사로는 전동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 목발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혼자서 와서 직접 와보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에

나오는 장면들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복면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디어를 접할 때 다른 면은 없는지 더 생각해 보고 직접 눈으로 판단하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가까운 곳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통해 유치원들은 투표 장소 의무 사항이 아닌데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유행 시간도 늘고 소독 등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데도 투표소로 허락한 유치원 관계자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투표소의 경계를 잇다〉 영상을 마칩니다. 진행 김채연, 촬영 고예원, 보조출연 정용근, 섭외 박현주, 도움 박현주, 김성은. 감사합니다.

검증 결과

· **절반의 사실** (계단 옆에 분명히 경사로가 존재하므로 '경사로를 없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실제 경사로의 상태가 울퉁불퉁하고 좁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크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근거 출처

강서구 소재 유치원 현장 조사, 정용근(지체장애인/유튜버) 인터뷰 및 동행 취재, 공직선거법 제147조, 미디어 분석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장애인 권리 예산을 눈뜨게 하다?

'이지효'

제6회 팩트체킹 공모전 청소년부 최우수상 수상작

검증 대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시위 및 장애인 권리 예산 관련 4가지 주장

· 세부 항목 1: 2022년 장애인 관련 언론보도가 약 5,300건에 달하는가?

· 세부 항목 2: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정부안 대비 106억 8,0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는가?

· 세부 항목 3: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경제 대국인가?

· 세부 항목 4: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가?

선정 이유

2020년부터 시작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계기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주목받았다. 전장연의 시위를 지지하는 측과 비난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예산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자 선정했다.

검증 방법

데이터 분석, 예산안 검토, 국제 비교, 문헌 조사

검증 내용

검증할 대상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해인 2022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총 47번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의 시위를 지지하는 측과 비난하는 측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장연의 시위를 계기로 많은 언론사와 시민들이 실질적인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해 새로이 관심을 두고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장연은 시위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외치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과 장애인권리예산을 다룬 경향신문의 기사를 선정하여 네 가지 부분에 대해 팩트체크해 보았다.

1. 주제 선정 이유

2020년 시작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계기로 우리 사회 속 장애인의 권리가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은 2023년 다시 시위를 재개하였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를 외치며 이를 위해선 장애인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관련해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주장과 현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검증 방법 및 검증 과정의 단계별 기술

팩트체크 1 "조사를 해봤더니 2022년 장애인 관련 언론보도가 약 5300건이나 되더라." 사실일까?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하여 언론 보도 건수를 수집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빅카인즈에 등록된 모든 언론사에서 '장애인 지하철' 키워드를 포함하여 보도된 뉴스 기사는 총 4,764건이었다. 하지만 빅카인즈에서 검색되지 않는 언론사가 있음을 고려하여 위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팩트체크 2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정부안 대비 106억 8000천만원 증가한 데 그친 점…" 사실일까?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27일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며 사회가 장애인 권리에 관심을 두게 된 점을

올해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정부안 대비 106억8000만원 증가한 데 그친 점을 비판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증액안의 0.8%에 불과하다.

전장연은 2023년 예산안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장애인권리예산이란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전반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전장연은 8월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속 장애인 권리 예산에서 1조 3,000억 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증액안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전장연이 예산 증액을 요구한 주요 분야는 활동지원 수가 증진을 위한 예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보조 예산 등이 있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들의 요구안 중에서 국회의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 권리 예산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장애인 근로지원인 예산인 106억 8,000만 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추가 배치를 위하여 증액된 비용은 106억이다. 하지만 전장연의 요구안 외 분야의 사업 중 장애인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과 후 서비스 지원 확대 예산으로 55억이 추가된 점을 미루어 총 증액된 장애인권리예산은 약 161억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다.

팩트체크 3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넘는다고 자랑하는 한국사회가…" 사실일까?

지난 7월 12일 올라온 서울경제의 세계 GDP 순위를 다룬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2년 세계에서 GDP 규모로 13위에 올랐다. 또한 지난 3월 7일 공개된 연합뉴스의 기사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27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계 GNI 순위로는 27위이다. 제시된 경제 지표들에서 대한민국이 모두 상위권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위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팩트체크 4 "한국사회가 이렇게도 지독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일까?

2001년부터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해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행동을 21년 전부터 해왔다면, 아마 지금쯤 문제가 해결되고도 남았을 것 같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다고 자랑하는 한국사회가 이렇게도 지독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게 아쉽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2022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등록 장애 인구는 2,644,7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5.1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3년 예산안 중 장애인 예산은 7.5조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1.17%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예산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해오고 있었다.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보도자료 '2023년 장애 관련 예산, 정부의 마음이 향한 곳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예산 중 장애인 예산은 6.8조 원으로 1.13% 비율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장애인 예산이 7.5조 원으로 증가하여 총 예산안 대비 1.17%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따른 장애인권리예산의 비율이 적정한지는 타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한국과 GDP, 1인당 GNI 등을 비추어 경제 규모가 유사한 OECD 국가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일본과 스페인이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에서 GDP 순위 3위를, 스페인은 14위를 기록했다.또한 중소기업투데이의 기사를 통해 일본은 세계 GNI 순위에서 23위를, 스페인은 30위를 기록했음을 확인하였다. 2018년 12월 18일 올라온 KOTRA 해외시장뉴스의 기사 〈[무역관 르포]배리어 프리로 장애인을 자유롭게 하는 일본〉에 따르면 일본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2월 15일 올라온 에이블 뉴스의 기사 '장애인 고용, 스페인에서 배워야 할 점'에 따르면 스페인의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는 약 10%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제작·발표한 통계 자료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1'에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2017)'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일본은 1.1%, 스페인은 2.4%를 전체 GDP 중 장애인복지지출에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 순위로는 각각 일본 31위, 스페인 11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7년 0.6%를 기록하여 세계 순위 35위에 머물렀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국가 소득 대비 장애인 예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비교 군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단한다.

3. 판정 결과와 이유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 장애인 관련 언론 보도가 약 5,300건이 되는가. 대체로 사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정부안 대비 106억 8000천만 원만 증가하였는가. 절반의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경제 대국인가. 대체로 사실. 넷째, 한국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구조 속에 놓여있는가. 대체로 사실. 종합적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결론은 '대체로 사실'이다.

4. 팩트체크 과정에서 발견한 시행착오 및 기타 특이사항

대한민국의 예산안은 정부와 국회의 상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친 후 정부로 재이송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단계마다 변경되는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잦은 혼동과 어려움을 겪었다. 기사를 작성하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유사한 타 국가들에 비해 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 사업에 관한 예산 투자가 현저히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차별 없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가 되길 고대한다.

참고 사이트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023년도 예산안(정부)'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2022. 8. 30
KOTRA 해외시장뉴스, '[무역관 르포] 배리어 프리로 장애인을 자유롭게 하는 일본', 2018. 12. 18
에이블 뉴스, '장애인 고용, 스페인에서 배워야할 점', 2006. 12. 15
OECD 홈페이지, 'Public spending on incapacity'

검증 결과

· 대체로 사실

- 보도량(주장1) : 대체로 사실 (빅카인즈 검색 기준 4,764건이나 미등록 언론사 포함 시 5,300건 근접 가능)
- 예산 증액(주장2) : 절반의 사실 (전장연 요구 분야 외에 55억 원이 추가 증액된 점 확인)
- 경제 규모 및 차별 구조(주장3, 4) : 대체로 사실 (경제 대국인 것은 맞으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권 수준임)

근거 출처

빅카인즈 언론보도 통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12. 23.), 한국무역협회 및 중소기업투데이 기사, OECD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KOTRA 및 에이블 뉴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친화적인 혁명이다?

'일리있조'

제7회 팩트체킹 공모전 청소년부 최우수상 수상작

검증 대상

생분해성 플라스틱 : 환경친화적인 혁명"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내용

· 세부 검증 항목: 해양 분해 여부, 분해 시간의 신속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 퇴비화 설비 필요성 여부

선정 이유

팀원 모두가 환경 보호에 관심이 높았으며, 연간 1인당 102kg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인류에게 혁명이라 할 만큼 확실한 해결책이 되는지 의문이 생겨 검증을 진행하게 되었다.

검증 방법

자료 검색, 성분 및 조건 분석, 실증 사례 비교

검증 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우리 팀은 모두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어 자연스럽게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먼저 접근하게 되었다.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연간 102kg이다. 이를 500ml 생수병으로 환산하면 무려 8,500개 규모의 분량인데 이 중 절반 가까운 규모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 이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삶과 크게 밀접해 있는데 흡사 가을의 일부가 지워진 듯한 폭염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올해 추석 기온이 평소보다 무려 8~9도 이상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최근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대체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항상 만능 포장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아예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생활양식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노선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환경친화적인 혁명'이라는 한 블로그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내용이지만 인류에게 혁명이라 할 만큼의 확실한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으며 그렇다면 이 대안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정말 친환경적일지에 대해 사실확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2. 검증 방법 및 검증과정의 단계별 기술

우리가 검증한 대상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 환경친화적인 혁명'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 글*이다. 이 게시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네 가지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해양에서 분해될까?
2.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짧은 시간에 분해될까?
3.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까?
4.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퇴비화 설비 시설이 필요 없을까?

---

* https://blog.naver.com/jstorycyclev/223408781640

우리는 먼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관련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문 기사의 내용과 전문기업의 자료, 해당되는 논문 자료 등을 검색하였다. 먼저 생분해 플라스틱을 조사하였고 이후 앞서 기술한 네 가지 검증 대상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진행하였다.

1)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생분해성이란 물질이 미생물 등의 힘으로 세세하게 분해되는 상태이다. 게다가 단지 가루가 될 뿐만 아니라, 곧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자연의 상태에 흡수될 정도까지 세세해지는 것이다. 즉,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미생물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플라스틱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친환경성이 높은 이유는 분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석유제품의 플라스틱(일반 플라스틱)은 결합력이 센 탄소로 이어져 있어 잘게 쪼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력이 약한 고리를 연결해두어 미생물이 공격할 때 빠르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6개월에 90%가 분해된다. 대신 일반 플라스틱보다 값이 3배 정도 비싸다. 일반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로는 플라스틱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방족 폴리에스터인 polybutylene succinate(PBS), polybutylene adipate-co-terephthalate(PBAT), polycaprolactone(PCL), polyglycolic acid(PGA) 등 모노머를 화학 합성하여 얻는 생분해성 고분자들이 있다. 또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고분자도 있는데, poly-β-hydroxybutyrate(PHB), poly-β-hydrolyvalerate(PHV), 그리고 이들의 공중합체인 PHB/PHV 등의 polyalkanoates(PHA)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천연 물질을 원료로 한 생분해성 고분자로는 Cellulose, Hemicellulose, Pectin, Lignin 및 저장 탄수화물인 전분 등 식물에서 유래하는 것과 새우, 게 등의 껍질을 포함한 Chitin질을 기초로 한 동물 유래의 것들이 있다. 현재 대규모로 상업 생산되고 있는 생분해성 고분자인(PLA)는 바이오매스 원료인 옥수수, 전분 등으로부터 발효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 PLA는 L- 형과 D- 형의 입체 이성질체가 있어 PLLA와 PDLA로 나뉜다.

2)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분해될까?

판정결과 - 절반은 사실, 절반은 거짓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와 논문 등을 검색한 결과, 모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분해되는 것은 아니고 해양에서 분해된다는 기준도 모호했다. 또한 심해환경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어떻게 분해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PHA는 토양에서보다 해양에서의 분해속도는 느리지만 해양에서 분해된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들 중 하나인 PLLA는 온도 60°C 이상, 습도 60% 이상의 조건이 되는 곳에서만 분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토양과 심해에서도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분해성 미생물들의 개체 수와 종류에 따라 플라스틱 분해도가 달라진다. 해양 속 플라스틱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붙어있고 미생물의 다양성이 해수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줄어든다. 그에 맞추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진 미생물의 종류도 줄어들게 되면서 심해에서의 플라스틱 분해도에 영향을 준다. 모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분해되는 것은 아니고, 해수의 깊이와 미생물의 수에 따라 플라스틱의 분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양에서 분해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아직 미생물들이 어떻게 심해환경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시키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따라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해양에서도 분해되는지에 대한 검증결과는 절반은 사실, 절반은 거짓으로 결론을 내렸다.

3)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실제로 짧은 시간에 분해될까?

판정결과 - 절반의 사실, 절반의 거짓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와 실험 영상을 찾아본 결과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분해 기간이 짧게 걸린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자연분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자연분해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 플라스틱 분해 기간이 500년 이상 걸리는 반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 3~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즉,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기간은 플라스틱에 비해 매우 짧으며 종이가 자연

분해되는 기간과 비슷할 정도로 일회용품 중에서도 분해 기간이 짧은 편이다. 생분해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온 섭씨 58도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6개월 안에 90% 분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토양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연분해가 어렵다. 따라서 분해 환경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는 짧은 시간 내에 분해가 가능하지만 실제 자연 환경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오랜 기간동안 분해가 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 절반의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4)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까?

판정결과 - 대체로 사실

온실가스 배출이 큰 기존의 플라스틱에 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식물 기반 재료와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추출되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생산은 전통적인 플라스틱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이는 탄소 분해 과정에서 흡수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반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일반적인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약 25% 수준의 배출량을 나타낸다. 이는 PLA와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관한 처리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일반쓰레기에 버려야 한다. 이것이 친환경적인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립이나 소각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분리배출이 생길 때까지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및 처리 규정이 요구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까는 대체로 사실이다.

5)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설비가 필요할까?

판정결과 - 대체로 사실

여러 기사들을 자료조사 한 결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퇴비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분해를 위해서는 퇴비화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6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며, 퇴비화가 가능하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퇴비화되면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 폐기물 관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러한 설비는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와 순환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일반쓰레기처럼 소각되거나 썩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매립되는 게 태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퇴비화 가능한 시설이 부족해 생분해 가능한 자연적인 토양이나 해양 환경을 현실에서 찾기 매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미디어 뉴스 펭귄과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닐과 일반 비닐을 분류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구분해 분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 전용 시설을 따로 두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퇴비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분해를 위해서는 퇴비화 시설이 요구된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효과적인 분해를 하려면 퇴비화 시설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생분해 플라스틱만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용 시설 부족하여 실제로 퇴비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퇴비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체로 사실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3. 판정 결과와 이유

검증한 대상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 환경 친화적인 혁명'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 글을 팩트체크한 결과, 플라스틱을 생분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이 포함되어있고 다양한 연구와 제품 개발은 혁명적이나 아직 현실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단보류'로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먼저 생분해 플라스틱은 해양에서도 분해되는지에 대한 검증 결과, 모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분해되는 것은 아니고, 해수의 깊이와 미생물의 수에 따라 플라스틱의 분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양에서 분해된다는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아직 미생물들이 어떻게

심해환경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절반은 사실, 절반은 거짓으로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실제로 짧은 시간에 분해되는지 검증한 결과 분해 환경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분해할 수 있지만 실제 자연환경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오랫동안 분해가 된다는 한계가 있어서 절반의 사실, 절반의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지 사실 여부를 검증 결과는 효과를 극대화 하기에 규정이 요구되지만, 기존의 플라스틱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퇴비화 시설이 필요한지 검증한 결과 생분해 플라스틱이 효과적인 분해를 하려면 퇴비화 시설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대체로 사실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검증 결과

· 유보

- 참고: 연구와 제품 개발은 혁명적이나, 현실화 및 인프라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 최종 판정을 보류함

근거 출처

기사 및 미디어 자료(페어뉴스,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환경 미디어 뉴스 '펭귄'), 전문 기관 및 연구자료, 영상 및 기타 자료

종이 빨대가 환경에 도움이 될까?

'오식현'

제8회 팩트체킹 공모전 청소년부 최우수상 수상작

검증 대상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 빨대는 정말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아이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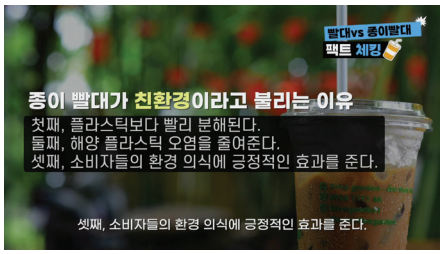
선정 이유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생산 및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짐에 따라 실제 효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검증 방법

데이터 비교 분석, 최신 연구 결과 검토, 생애주기 평가(LCA), 성분 및 분해 조건 조사

검증 내용



카페에서 흔히 마주치는 종이 빨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친환경 아이템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정말로 종이 빨대가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이 주장을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통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플라스틱보다 빨리 분해된다. 둘째,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줄여 준다. 셋째,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과연이 세 가지가 사실일까요? 먼저 긍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환경청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빨대는 완전히 분해되는데 300년이 걸립니다. 반면 종이 빨대는 24주 안에 분해가 가능하죠. 또한 일부 카페나 기업은 종이 빨대 도입을 통해 환경을 위한 노력을 알리고 있고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근거도 많습니다. 첫째,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빨대 5억개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플라스틱 빨대의 매립시 이산화 탄소 발생량은 56만 6,000kg, 종이빨대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258만 kg입니다. 또한 소각시 플라스틱 발대의 이산화 탄소 발생량은 139만 kg, 종이 발대의 이산화 탄소 발생량은 270만 kg입니다.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종이 빨대의 이산화 탄소 발생량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둘째, 유해 화학 물질 문제입니다. 2023년 벨기의 연구팀은 종이 빨대의 90%에서 PFAS명한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분은 인체에 축적되고 환경에도 오래남아 문제가 됩니다. 정리해 보면 종이 빨 때는 분해 속도가 빠르고 상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의 이상화 탄소 배출량, 유해 화학 물질, 실제 효과 부족 같은 문제로 인해 완벽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즉 환경에 좋은 부분은 있지만 그 효과가 과장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결과 종이 빨대는 환경에 좋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렇다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단점이 있죠. 이렇게 알아본 결과 진짜 친환경적인 선택은 빨대를 대체하는 것보다 빨대를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용자인 우리가 재활용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어느 빨대를 사용하던 전보단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

· **절반의 사실** (분해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장점은 있으나, 탄소 배출량이 훨씬 많고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친환경 효과가 과장되었기 때문임)

근거 출처

영국 환경청, 대한민국 환경부 용역 보고서, 벨기에 연구팀(2023), 환경종이네트워크(EPN), HSU(Humboldt State University)